

제4장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탈냉전과 민주화가 심화된 1990년대는 한일 양국에 있어 변화와 개혁의 시대였다. 경제적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정치변동을 가속화 시켰고, 정치적 변동은 다시 경제개혁을 촉진시켰다. 1980년대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투자과 지출을 확대했고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본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작된 저성장의 위기가 1990년 내내 지속되었다. 경제실책을 이유로 내각이 자주 교체되었고 일본의 기적을 낳았던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개혁의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도 경제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1990년대 양국 경제협력은 국내적 경제위기와 대외적 경제환경의 변화가운데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시작된 한국의 핵심 산업이 성숙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일 기업의 경쟁구조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개방화, 세계화 등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일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를 주도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비중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 가운데 한일 경제협력은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심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기술이전이나 직접투자의 확대 노력이 구체화되었고 부품 및 소재 부분의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증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을 심화시켜 무역역조가 확대되었고 한일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했다. 한일경제협회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가운데 양국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해소하는 핵심적인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I _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일 경제협력

1980년대 말부터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 역시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었다. 냉전 질서의 붕괴는 정치적 민주화와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경제적 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정치변동을 가속화 시켰고, 정치적 변동은 다시 경제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세계질서의 변화는 동아시아 경제에 더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 민주화, 세계화는 양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성과가 지체되면서 양국 경제는 1990년대 공히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조적 불황을 겪게 된 것이다.

양국의 경제발전은 국가 주도의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1955

년 보수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화를 이룩한 일본은 60~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일본의 경제발전은 아시아 각국에게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과 자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도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주도의 산업화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양국 경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수출주도 산업화는 국내적인 산업 불균형과 더불어 대외 무역불균형을 초래하여 무역분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 시장자유화와 더불어 경제개혁이 적극 추진되었다. 일본은 1985년 G5 국가와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고 경제개혁을 가속화했다. 일본에게 1980년대는 소위 ‘일본모델’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다. 30년 만에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1980년대 들어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와 진출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엔고와 3저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수출산업이 급성장 했다.

그러나 시장자유화와 경제개혁은 곧 위기를 초래했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작된 저성장의 위기가 1990년 내내 지속되었다. 경제실책을 이유로 내각이 자주 교체되었고 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진 1994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수당 자리를 내어주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는 1960~70년대 일본의 기적을 낳았던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개혁의 시기였다. 탈냉전 이후 가속화되는 자유화와 개방화의 흐름 가운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하였다. 노태우 정부가 개방화와 북방정책을 추진하였다면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경제의 경기침체는 지속되었고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 국내적 경제위기와 대외적 경제환경의 변화 가운데 양국 경제협력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양국 산업의 구조변화다. 1970년대 시작된 한국의 핵심 산업이 성숙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일 기업의 경쟁구조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개방화, 세계화 등을 추진하면서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일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시장 진출과 투

자를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를 주도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비중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 가운데 한일 경제협력은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심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기술이전이나 직접투자의 확대 노력이 구체화되었고 부품 및 소재 부분의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증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을 심화시켰고 무역역조가 확대되면서 이것이 한일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의제로 남게 되었다.

Ⅱ_민주화 및 세계화에 따른 경제정책과 대일 경제협력

1.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1987년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등의 정치적 민주화는 한국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획기적 변화였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억압되었던 노동부문의 정치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나 기업의 경영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 1980년대 들어 민간중심의 시장경제 체제로 재편되면서 기업 내부의 개혁도 시작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민주화와 더불어 세계화의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경제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무역, 외환, 금융의 자유화와 더불어 수출증대를 위한 산업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중점을 주었던 개방화와 세계화 정책은 세계적인 경제질서 변화 때문이었다.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역 통합은 가일층 확대되었다. 1988년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지역 통합이 가시화되었고 1989년에는 일본과 호주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가 제기되었다.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 이후 1992년에는 유럽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이 체결되어 거대 지역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경제적 지역통합이 가속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증가했고 이는 대외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온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구조적 변화의 과제를 던져주었다. 미국은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철회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했다. 1992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고 단일유럽시장 선언 등 세계경제의 지역화와 세계화의 추세가 확대되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대외환경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기초는 개방화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추진하던 대외개방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다. 우선 금융 및 외환부문의 개방화가 추진되었다. 금융 및 외환부문의 개방화는 1980년대 중반 무역수지 흑자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3저 호황에 의해 1986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통상마찰 방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외환 및 금융부문 개방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1988년 11월에는 경상거래에 있어서 외환거래의 규제를 상당부분 제거하고 환율변동 폭을 완화하여 외환거래의 확대를 모색했다. 내부적으로는 증권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 외국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외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전체적으로 외환거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4-1〉 경상수지 및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무역수지	-0.2	42.1	76.6	114.5	46.0	020.0	-69.8
무역외수지	-14.5	-6.3	9.8	12.7	2.1	-4.5	-18.8
이전수지	5.8	-	12.2	14.5	2.4	2.7	-1.5
경상수지	-8.9	46.2	98.5	141.6	20.5	-21.8	-87.8
수출증가율(%)	0.4	28.3	36.4	29.1	3.0	2.8	10.3
수입증가율(%)	-3.3	12.3	29.9	24.9	17.9	14.7	17.6

출처: 박진근(2009), p. 318.

다음은 금융부문의 자유화 정책이다.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부문을 통제함으로써 투자재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대외개방과 자유화가 진행됨에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따라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시장기능의 회복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내적인 금융시장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외국 투자자의 국내투자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금융시장, 특히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자유화를 1996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금융시장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금융감독 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확장정책은 금융 부문을 부실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통상 및 무역 부문의 자유화도 적극 추진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규제를 철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1985년 26.4%에 달했던 관세율은 1995년까지 9.8%까지 하락하였다. 수입규제에 대한 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1992년 공업제품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포함한 수입규제 철폐로 705개에 달하던 규제 품목이 241개로 축소되었다. 또 1995년 5월 무역자유화는 78개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추가로 철폐함으로써 관세 대상 품목의 95% 이상이 수입자유화 되었다.

개방화 정책이 외국 자본, 투자 및 물품의 국내 수용을 위한 정책이라면 세계화 정책은 대외 진출을 위한 외부지향적 특성을 가진다. 냉전 구조의 종결과 더불어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구 소련과 동구권 및 제3세계와의 외교적 관계를 구축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안보적 목적과 더불어 경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김영삼 정부는 19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특히 집권 중반 이후 소위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고 한국경제의 대외진출 확대와 OECD 가입을 추진하였다.

〈표4-2〉 주체별·재원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구분	주체별			재원별		
	공공	대학	기업	공공부문	민간부문	외국부문
1970~1975	66.0	5.1	28.9	61.9	29.9	18.3
1976~1980	58.4	8.7	33.4	52.5	46.5	1.0
1981~1985	33.6	11.0	55.2	30.0	69.3	0.7
1986~1990	20.5	9.5	69.9	18.0	82.0	0.1
1991~1995	20.5	7.2	72.3	20.3	79.6	0.2
1996~2000	16.8	10.9	72.3	28.4	71.5	0.1
2001~2008	13.4	10.3	76.2	(26.8)	(72.9)	(0.3)

※ ()은 2008년 수치임

Source: KISTEP,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2009

개방화, 자유화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과거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금융, 투자, 기술도입 등에 있어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증권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자유화 조치는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금융 비중의 변화는 정부의 간섭을 받는 은행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었다. 또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잉여이익금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4-2〉와 같은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기업비중의 증가가 대변한다. 1970년대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60% 이상을 담당했다. 1980년대부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72%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측면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정부는 사양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함으로써 시장충격을 완화시켰다. 대기업이 점유하는 수출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경쟁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심화시켰다. 전략적 유치산업이나 신규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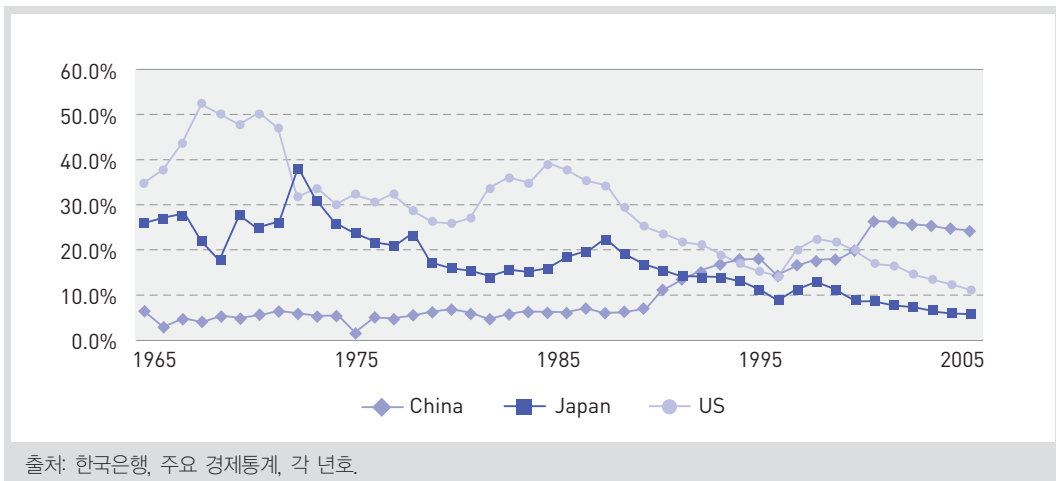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럼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로 변모했다. 사양산업 및 유치산업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 보호 등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 지속되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경쟁정책 등 간접적인 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였다.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 대일 경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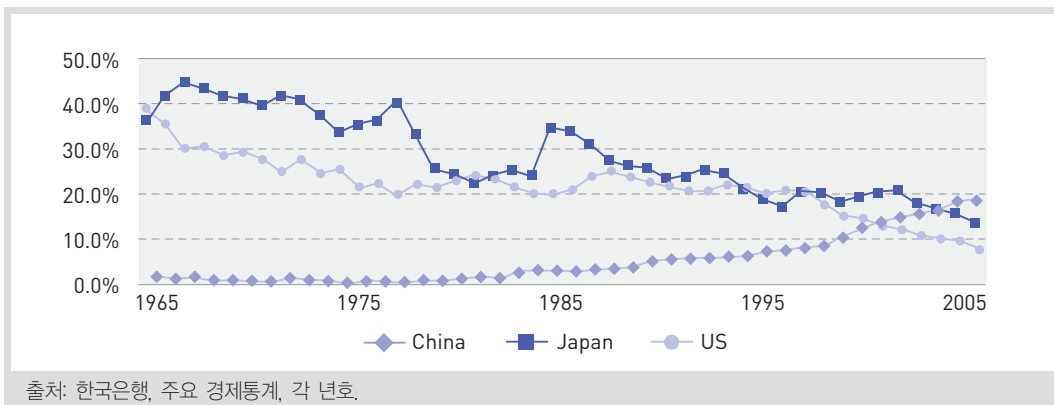
1990년대 자유화와 세계화라는 경제정책 기조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우선 탈냉전 이후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한국의 수출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되었다. 199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 제3세계, 동구,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다변화로 일본 및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대폭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기업들의 경쟁이 시작된 것도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도표4-1〉 한국의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의 변화



수입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은 수출시장 비중의 변화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반면 중국이 한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감소하면서도 수입비중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역조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양국 간에 상존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1990년대에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도표4-2〉 한국의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의 변화



경제자유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4월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3저 호황이 끝나고 경기침체와 수출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정체됨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기업 측면에서는 투자활성화,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출범 초기부터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수출부문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전략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의 과잉투자의 원인이 되기

도 하였다.

과잉투자가 대일역조를 확대시킴에 따라 역조축소와 대외경쟁력강화가 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무역역조 문제의 근본적인 시정을 위해 기술이전과 기술협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무역역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적교류, 투자와 기술이전 등의 협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이에 대한 일본측의 전향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일은 기술이전과 협력, 공동개발을 위한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화를 이루게 되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과 1991년 1월 가이후 도시키(海部 俊樹) 총리 방한시 양국 기술협력 문제가 중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부품 및 소재,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대외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입규제 정책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7년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수입불균형을 초래하는 품목을 정해 수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실상의 수입규제였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 의존적인 중간재, 소비재 등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개발이나 타국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77년 7월 7개 품목을 시작으로 1988년에는 344개 품목, 1990년에는 268개 품목, 1998년 88개 품목이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1999년 완전 폐지되었다. 사실상의 대일수입 규제 제도였으므로 WTO 협상에서 일본은 수량적 무역제한 조치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표 4-3〉 1990년대 한일 통상장관 회담 개최와 주요 내용

시 기	형 식 과 세 부 내 용
1992.06	제1차 한일 통상장관 회담 한일무역 불균형 시정,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산업과학기술협력 재단 설치
1993.08	제2차 한일 통상장관 회담 무역 및 투자와 기술의 상호협력, 일본측의 시장개방
1994.05	제3차 한일 통상장관 회담 매년 1회 한일 투자와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실시, 부품산업 협력
1997.07	제4차 한일 통상장관 회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확대, 벤처기업 협력, 젊은 기업인 교류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키이치(宮澤 喜一)수상 간의 정상회담 이후 1993년 8월 9일 제20차 대외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경제관계는 경제논리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대일 수입다변화 품목을 향후 5년 이내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일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결의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1993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 지적재산권 회의에서 일본인의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EC와의 보호수준과 동일한 소급보호 수준을 부여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기술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적 장애요인을 개선시켰다 (외교백서 1994).

이와 같이 1990년대는 전두환 정부에 이어 양국 간 정상외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 협상도 활발해졌다.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회담이 1992년 1월 재개되었고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회담의 주요 내용은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이였다.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1992년 9월에,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1992년 12월에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기술협력을 촉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양적인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교류협력이 진전될 수 있었다.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계획 합의문

大韓民國 大統領

盧 泰 愚 閣下

日本國 總理大臣

미야자와 키이찌 閣下

1992년 1월 한·일 정상회담시의 합의에 따라 한·일 양 정부의 대표단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을 위해 그동안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는바, 동 협의의 결과 별첨과 같이 실천계획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 정부의 대표단은 한·일 양국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상호 협력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함과 동시에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및 산업과학기술협력 등의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인식을 깊게하여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금후 일층 진전하게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내실있는 실천계획을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협의에 있어서 양 정부의 대표자는 한국측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일본측의 협력, 한국상품의 일본시장에의 참여노력에 대한 일본측의 지원, 한국측의 투자환경 및 기술이전 환경의 개선, 한·일 경제계간의 상호이해의 증진, 양국의 산업간 협력의 촉진, 환경분야에서의 양 정부간 협력 등에 관해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양 정부의 대표단은 이와같이 하여 작성된 실천계획이 향후 양국의 정부간 및 민간간의 협력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한·일간 무역의 확대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정부의 대표단은 실천계획의 진척에 관하여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2. 6. 30

외무부 제2차관보

허 승

외무성 외무심의관

마쓰우라 코오이찌로오

Ⅲ_일본의 경제위기, 경제개혁과 한일 경제협력

1. 잃어버린 10년의 정치 및 경제개혁

1990년대 일본 경제는 장기불황이 계속되었다. 1990년 소위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일본 경제의 불황은 주식시장 붕괴, 기업활동 축소, 소비하락 등으로 이어지다 결국 거대 금융기관이 도산함에 따라 그 충격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제불황은 정치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55년 이래 계속되어 온 자민당 집권에 대한 비판으로 1994년 선거제도, 정치자금 등의 정치개혁법이 통과되었다. 정치개혁법 통과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위기를 자초한 정치실패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지체와 정책실패는 일본의 경기불황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경제는 1960년대까지 10%의 고도성장을 유지하였고, 70년대부터는 5% 전후의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가 산업구조를 개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기업의 세계진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은 세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1974년 1차 석유파동, 1979년 2차 석유파동 그리고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였다. 1974년 석유파동의 여파로 일본 경제는 전후 처음으로 -0.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83년에는 2.8%, 그리고 1986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세 차례의 경제위기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가속화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효과적이고 신속했다. 1974년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과 더불어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인한 개발수요로 인해 1974년 2월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37%에 달했다(이우광 1996). 후쿠다 내각은 적극적 수요관리 정책으로 지급준비율 인상과 임금억제 정책을 실시함으로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써 위기를 극복했다. 비효율적 산업에 대한 생산축소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전자, 기계 등의 산업에 대한 육성으로 산업을 효율화 시켰다. 2차 석유파동은 이미 1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체질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단기적이고 미미했다.

급격한 엔고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받았던 1985년 전후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개선과 투자확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였다. 기업은 구조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추진했고 해외로의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엔고에 의한 수출감소에 대응했다. 반도체, 컴퓨터 등 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시기다. 원가절감 노력과 더불어 내수시장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엔화가치가 1985년 대비 40%나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20%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1987년의 무역흑자는 964억 달러로 플라자 합의 이전 1984년의 443억 달러의 두 배가 되었다(이우광, 1996).

그러나 이러한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호황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곧 붕괴되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시작으로 주식시장이 절반으로 하락하였다. 버블 붕괴는 잉여자금의 과잉과 과잉투자 때문이었다. 1985년 이후 정부는 금리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했다. 1987년의 재할인율은 2.5%로 최저 수준으로 관리되었다. 통화공급의 증가와 기업의 거대한 이익금 등의 유동자금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었다. 과잉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됨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연쇄됨으로써 버블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85년 13,000엔이었던 일본평균주가는 1990년 30,000엔까지 상승했고 지가지수는 5년 사이 3배나 상승했다(이우광 1996).

경기과열이 주식과 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자 일본 정부는 1990년 재할인율을 2.5%에서 6%로 인상시켰다.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용자 규제와 단기양도중과세제를 도입하였다. 갑작스런 시장규제는 증권 및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버블 붕괴는 기업의 가동률 저하, 과잉고용 및 과잉채무로 나타나면서 장기불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전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이 지속된 것은 위기의 원인이 구조적이고 부실의 규모가 크다는 원인과 더불어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및 주가하락의 가치는 1995년까지 약 1,000조 엔으로 일본 GDP의 2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도 100조 엔으로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긴축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버블붕괴를 복합불황으로 악화시키게 했다. 그 극복을 위해 일본 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 등의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했다. 정·재계는 소비세 인하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요구하였지만 재정정책에 의존한 경기대책이 경기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공공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치개혁과 경제정책의 복잡한 역학 관계 역시 경제개혁을 지체시킨 요인이다. 1980년대 말부터 관료와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은 자민당 주도의 정치체제에 대한 도덕성을 훼손시켰다. 결국 정치개혁은 1994년 정치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정치부패의 근원이라고 지목된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거부터 진행되어오던 행정개혁도 적극 추진되어 1990년대 중반 하시모토(橋本) 정권은 관료주도의 경제체제를 정치주도로 전환하고 시장과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 대외경제정책의 기조와 한일 경제협력

버블 붕괴 이후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복합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다자주의, 지역주의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은 이러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일본경제외교의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이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적극적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는 1985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년 이후다. 물론 이전에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지역협력에 참여하고 여러 형태의 지역협력 구상을 발표해왔다. 1957년 기시(岸) 수상은 동남아시아 개발기금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에 따라 1966년에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창립되었다. 1967년 미키(三木)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외교’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아시아와 태평양을 포함하는 지역주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후 오히라(大平) 수상은 ‘환태평양연대구상’을 발표하고 아시아국가 및 태평양 연안 국가를 포함하는 ‘태평양경제공동체’를 발표하였다. 전후 초기 일본의 지역구상이 전후 배상과 원조의 맥락에서 구상되었다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일본의 지역개념은 안보 및 경제 부분의 이해가 반영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진창수 2006).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이러한 일본의 지역통합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엔화 강세로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간에 북미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어 지면서 일본 경제의 중요 협력대상으로써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산성 내에 설치된 아시아태평양무역개발연구회(アジア太平洋貿易開發研究會)는 1988년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NIEs와 아세안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협력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창하였다(진창수 2006). 통산성의 구상은 무역자유화와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 미국 등의 서구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역구상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1989년 APEC으로 구체화되었다(Terada 2008).

Ⅳ_한일경제협회의 주요 사업과 성과

1988년 10월 박용학 회장이 한일경제협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용학 회장은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방일수출촉진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본국내 유통시장 연구를 통한 일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관련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방일부품개발협력단과 더불어 한일중견경영인교류촉진단의 일본과 견을 주도하는 등 한일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본 각 지방과의 정기항공편 개설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한일 경제관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5년 5월 박용학 회장은 일본정부로부터 한일경제교류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일등서보장(勳一等瑞寶章)을 수상하였다.

1. 산업과학기술 협력

1990년대 한일 경제협력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산업과학기술의 이전과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1992. 9)된 것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되는 무역역조 문제는 계속적인 양국 경제현안이였다. 한국은 기술이전과 협력을 지속 요구하였고 일본측의 협력적 조치들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역조는



25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기자회견하는 양국 단장(93)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했다. 1980년대 들면서 무역적자 폭이 축소되고 1986년부터는 대세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대일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훨씬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 1990년대 초부터 교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대일적자 문제가 중요 경제정책 의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도,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업과학기술 협력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표4-4〉 한일 무역현황 1988~1996

(단위: 억달러, %)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출	금액	120.0	134.5	126.3	123.5	116.0	115.6	135.2	170.5	157.7
	비중	19.8	21.6	19.4	17.2	15.1	14.1	14.1	13.6	12.2
수입	금액	159.2	174.4	185.7	211.2	194.6	200.2	253.9	326.1	314.5
	비중	30.7	28.4	26.6	26.6	23.8	24.8	24.1	24.1	20.9
무역수지	금액	-39.9	-59.3	-87.6	-41.5	-78.6	-84.6	-118.7	-155.6	-156.8

출처: 통계청

양국 산업과학기술 협력은 1992년 1월 미야자와(宮澤) 수상 방한시 무역불균형 완화 및 산업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7개항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진전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수상은 (1)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 (2)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3) 환경협력, (4) 산업간 교류협력 추진, (4) 한일 경제인의 포럼 구성, (5)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업 개방, (7) 그리고 투자 및 기술이전 환경의 개선 등에 합의하였다.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2회에 걸친 실무자 접촉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7월 1일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우선 산업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로써 양국에 각각 10억엔 규모의 재단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규모의 정부지원 및 연관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 공동연구, 인적 교류 이외 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합의한 테마에 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기술정보 교류를 위해서 한국의 생산기술연구원(KAITECH) 및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일본의 신기술사업단(JRDC) 및 일본산업기술진흥협회(JITA)로 하여금 공적 시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통산성이 보유한 외국특허의 영문 초록을 일본 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하여 한국 산업기술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 일본 정부는 건설, 기계, 전기, 전자, 금속, 화학, 정보처리, 농림수산 등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업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영문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이전과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정보 등에 있어서의 상호교류가 구체화 되었다.

2.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협력

(1) 인적교류

구체적 실천계획에서는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시장 확대 조치도 구체화되었다. 합의사항에 따라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일 수출촉진을 위한 · 일 시장협의회가 대일 수출촉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한국정부는 한국의 기업이 시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적절한 후속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



수출촉진단 상담회

하기로 했다. 또 일본정부는 매년 10월 시행하는 수입확대 캠페인에 한국측의 참가를 지원하기로 하며 일본측 수입촉진단의 한국 파견과 수입촉진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한국 우수상품전시회 등의 개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인력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합의되었다. 양국 정부는 대일수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일수출 유망상품 발굴 및 디자인 지도 전문가를 1992년에 2명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무역진흥회는 설명회 및 홍보지 배포 등을 통해 일본 내에 활동 결과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 한국측의 시장조사원 2명이 일본무역진흥회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또 일본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가 실시하는 무역실무자연수의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인력교류의 효율성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을 높이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양국 인적교류의 규모와 내용이 크게 진전되었다. 1993년 일본의 대한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9월 6~15일간 민간합동 투자유치단이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센다이, 후쿠오카 지역에 파견되어 일본 기업들과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은 매년 300여명 내외의 한국 기술자의 일본 연수를 실시하였고 일본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연구조사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수출입 촉진단의 상호방문, 한국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상호협력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사상최대의 방한국경제교류촉진단 279명을 이끌고 내한한 마쓰오 타이이치로(마루베니 회장)단장의 도착 기자회견. 투자와 기술협력, 수입상담등 폭넓은 활동을 발표

(2) 협의체 구성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 가운데 양국 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제안되고 운영되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식을 계기로 방한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 登) 수상과 정상회담에서 21세기에 대비한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써 '한일 21세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한국측 위원장은 고병익 전 서울대 총장, 일본측 위원장은 스노베 료조(須之部 量三) 전 주한일본대사가 선임되었다. 21세기 위원회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1991년 양국 총리에게 정치, 경제, 과학기술, 역사, 문화, 청소년 교류 등의 5개 분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표4-5〉 한일경제인포럼 명단

구 분	한 국 측	일 본 측	
판이원회	박용학(한국무역협회 회장)	히라이와 가이시(平岩外四)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유창순(전경련 회장)	에지리 고이치로(江尻宏一郎)	일본무역회 회장,
	김상하(상공회의소 회장)	사이토 히로시(齊藤裕)	신일본제철(주) 회장
	조석래(효성그룹 회장)	하구라 노부야(羽倉信也)	일한경제협회 회장
	강진구(삼성전자 회장)	요네쿠라 이사오(米倉功)	이토추상사(주) 회장
	정세영(현대그룹 회장)	와다리 스기이치로(渡里杉一郎)	(주)도시바 상담역
	홍성좌(한국무역협회부회장)	아카자와 쇼이치(赤澤璋一)	(재)기계산업기념사업재단 회장
	연구위원회		고지마 미키오 (小島幹生)
주영석(한일경제협회부회장)		사이토 마사오(齊藤正雄)	전 일본무역회 전무이사
조규하(전경련 전무)		다케우치 히로시(竹内宏)	(주)장은중합연구소 이사장
김도형(KIET 일본실장)		도리이 야스히코(鳥居泰彦)	게이오대학 총장
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장)		미요시 마사야(三好正也)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야마다 가쓰히사(山田勝久)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
		이시하라 마스오(石原増男)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한일경제인포럼은 1992년 미야자와 수상 방한 시 일본측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한일경제인포럼을 제안한 것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집중적인 심층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2년 7월 발표된 실천계획의 제5항에 의해 양국 경제문제에 관해 경제인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써 한일경제인포럼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표출되었다. 한국은 본 포럼을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기계, 전자, 전기, 소재, 섬유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1년 정도 한시적 운영기구로 설치할 것과 따라서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결국 조속한 개최에만 합의하고 양국 재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일경제인포럼이 구성되어 출범하였고 1993년 10월 13일까지 3차에 걸친 본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무역, 기술협력, 투자 및 한일 중견 중소기업간 협력 분야 등에서 솔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각각의 개선대책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회의의 사무국은 각각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담당하였다.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표4-6〉 한일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 요약

의 제	보 고 내 용	
무 역 불균형	한국	(1) 임금·물가 안정, 금리의 인하 등을 통한 적절한 경제운용의 지속·강화 (2) 정부의 규제완화에 의한 민간의 활력과 창의의 적극 활용 (3)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4) 중간재 및 부품의 자급력 향상을 위한 부품공업의 적극 육성 (5) 외국인 투자촉진 및 기술협력을 위한 환경의 개선 (6) 일본 등 중요시장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의 전개
	일본	(1) 지속적인 내수확대 및 수입촉진을 위한 적절한 경제운용의 강화 (2) 시장원리에 입각한, 세계속에서의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개방화 추진과 산업 구조의 조정,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시정, 내외가격차의 시정, 유통구조의 합리화 촉진, 공공부문 건설시장 개방의 촉진 (3) 대한투자, 산업·기술협력의 추진 (4) 한국이 추진하는 일본시장 개척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기 술 협 력	한국	(1) 기술도입에 관한 정부규제의 완화 - 절차의 간소화, Know-How를 포함한 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이전 기술에 대한 보호제도 마련 (2) 첨단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및 외국의 신기술 도입시 소요자금에 대한 우대 제도의 확충 (3)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정책의 추진 (4) 일본의 퇴직기술자 초청활용(장기고용 허용 및 입국절차 간소화) (5) 공개된 일본 과학기술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6) 한국내 일본의 산업기술정보센터 설치
	일본	(1) 현장중심 생산기술의 육성과 이전 협력 (2) 정부기관 보유기술의 대한이전 협력 (3) 환경보호·에너지 기술 이전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4) 정부의 연구장학생 초청 협력
	공동	(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사업의 운영에 대한 협력과 연대 및 신규 사업의 발굴 협력 (2) 양국기업간 협력의 성공사례 발굴, 홍보 (3) 기업간·정부관련 연구기관간 신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4) 일본정부관계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 참여 (5) 신기술 전시회 개최를 통한 기술협력사업의 적극 추진
투 자 확 대	한국	(1)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의 추진 및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 - 투자제한업종의 단계적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세제상 Incentive 확대, 토지취득 규제 완화 및 원활한 해외 자금 조달 지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금리인하, 노사관계의 안정 (2) 외국투자기업과 한국기업간의 협동정신 조성 (3) 적극적인 대일투자 유치활동 전개

의 제	보 고 내 용	
중소기업 협 력	일본	(1) 적극적인 대한투자 추진 (2) 대한투자 일본기업 생산품의 대일수출 확대 (3) 한국측의 대일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한국	(1) 한국 중견·중소기업 경영자의 자조노력(기업가정신 함양) (2) 한국 정부 및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도·지원
	일본	(1) 한국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자, 기술자, 기능공의 일본내 연수 실시 (2) 기업경영, 공장관리에 관한 지도협력 - 일본 전문가 또는 한국 전문가와의 공동으로 기업진단 및 제언, 일본 전문가 또는 한국 전문가와의 공동으로 업종별 중견·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대책 제언
	공동	(1) 양국 중견·중소기업의 교류증진체제 정비 - 업종별 소그룹별 교류 촉진, 양국 중소기업 단체간의 교류증진과 상호 상주원의 기능 강화 (2) 한국측이 희망하는 중소기업형 이전가능기술에 대한 기업간 교류알선 (3) 한국의 중견·중소기업과 일본의 대기업간의 부품공급사업 추진 및 이에 대한 일본의 알선 협력

출처: 한일경제인포럼(1993) 최종 보고서

또 한가지 1990년대 설립 및 운영된 협의체는 한·일 신경제 협력기구(NIEP: New Initiatives for Economic Partnership)이다. 1993년 11월 6일 김영삼 대통령은 경주에서 호소카와(細川)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신경제 협력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94년 4월 21일과 10월 서울과 도쿄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차 한일 신경제협력기구 회의에서는 의장요약 채택을 통하여 한일 양국이 경제논리와 호혜주의에 입각한 경제협력관계 기조를 확인하고 8개 경제분야에 대한 협력강화에 합의하였다(외교백서 1995).

- 1)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강화 및 한국상품의 대일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일측의 시장개방 노력 계속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
- 2) 양국 기술협력재단간 공동사업 확대 및 재단기금 조성 촉진 및 한국의 부품 산업 등 육성 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협력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강화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 3) 투자사절단의 상호파견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의 지속적 추진
- 4) 건설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
- 5) 한·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추진
- 6) 환경, 동양의학 및 한자연구 분야에서 실무협의 개최 등을 통한 3국간 공동협력
- 7) 의학, 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구체협력방안 협의 계속
- 8) 한일 지방간 경제교류 강화

이와 같은 합의는 이제까지 양국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민간 차원의 다양한 대화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의제이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다. 지적재산권, 한국 주재 일본 상사의 지위, 그리고 수입선다변화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이러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협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한일 무역역조, 투자감소, 기술협력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는 지속되었다.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한 합의와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무역역조 문제는 1990년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일 무역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



3.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1980년대 정상회담과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 의제들은 정부 간 대화와 별도의 협의채널을 통해서 논의되었다. 또 한편으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지도와 규제에서 협력과 탈규제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 간의 직접적 대화와 협력이 상호 증진되었다.

일본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구조전환 가운데 한일경제협회의 논의 의제도 다양화되고 변화하였다. 1990년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한일경제협회의

기능도 정부정책의 시행 기관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토의와 민간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로 변화하였다. 양국관계에 집중하였던 의제는 동아시아, APEC, WTO, 세계화 등의 세계 경제질서 변화 가운데 양국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또 1992년 산업기술협력을 위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양국에 설립완료됨에 따라 기술이전과 협력, 인적교류 부문은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전담함으로써 전문화된 협력의 증진을 이룰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대체로 이전에 논의되어 왔던 경제교류 증진, 산업기술 협력, 그리고 무역증진 등을 위한 의제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무역불균형, 산업과학기술이전 등과 관련하여 1993년 제25회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양국 간의 현안인 기술이전문제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정부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정부 간에 협력의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한일경제협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되었다.



25회 한일경제인회의. 축사하는 김경식 부총리('93)

이 시기 새롭게 시작된 신규사업은 한국중소기업자동화기술연수와 한일중견경제인교류사업(1996년 경제인교류촉진단으로 명칭 변경)이다. 중소기업자동화기술연수 사업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협력의 방편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가 주관하였고 한국측의 생산성본부(KPC)가 카운터 파트너였다. 연수비용은 한일 각각 절반씩 부담하였다. 또 중견경제인교류사업은 양국의 중견기업경영인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경영 노하우와 경영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20여명의 젊은 중견기업인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4월 일본 카나자와(金澤)에서 열린 제20회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원회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3개의 합동분과회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무역분과회에서는 처음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한중교역전망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2000년대에 있어서의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한일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 한국측은 한일 간 무역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국내에서 승인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일본기업에 의해 발주된 한국 산 제품(OEM 생산) 및 한일 합작기업 제품의 통관에 있어서 일본국내 생산제품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일본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측은 한일분업의 실태와 전망 분석을 통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분야에서의 분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분야는 일본경제의 핵심산업이며, 한국 역시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략산업으로서 부품·소재 및 설비 등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한일경제 관계의 확대와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활동방향에 관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 다음해 서울에서 열린 제21회 회의에서는 각각의 합동분과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 첫째 양측 간의 오랜 현안이었던 무역불균형으로 ‘무역마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확대균형을 지향하는 무역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동시에 GATT체제 하의 건전한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라도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가면서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양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평적·상호보완적인 분업관계의 구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제3국에서의 협력 등 국제적·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협력방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금융 및 자본 자유화, 증권시장의 국제화 등 한국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유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쌍방은 금융·증권·보험·유통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한층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경제인뿐 아니라 널리 국민적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를 더욱 심화시키

기 위한 이런 형태의 인적교류 또는 문화교류 등의 축진이 요망된다.

제22회 회의는 1990년 4월 일본 고베(神戸)에서 열렸다. 경제협력분과회에서는 일본경제의 노사문제와 지구환경문제가 논의되었으며, 투자기술분과회에서는 한일기술 및 투자협력에 대한 양측 발표가 있었다. 또한 무역분과회에서는 일본측에서 일본의 소비동향과 한국상품에 대한 기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에서 일본측은 한국제품의 신뢰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일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혁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과 소비구조 더 나아가 사회구조까지 파악하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 사회구조의 중요한 변화로 인구구조의 변화, 기업의 노동조건 변화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을 언급했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세계정세 변화 및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다. “최근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지도력이 후퇴하고 냉전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 양진영에 의한 군사적·이념적 대립의 시대를 벗어나, 국제협조에 의해서 경제적·현실적인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보다 성숙된 관계를 구축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권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3회 회의는 1월에 발생한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9월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양측 단장인사에서 한국측은 냉전구조의 변화와 블록화 현상 대두 등 세계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측은 본 회의 전날에 있었던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북한이 동시가입을 달성한 데 대한 축하의 인사말과 함께,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각각의 합동분과회에서의 발표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같이하였다. 첫째 올해 들어와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시장개방을 통한 수입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GATT체제 하의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에 따라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째 최근 양국 간의 투자·기술협력이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제반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다 성숙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문화적인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교류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제24회 회의(1992. 4 일본 센다이)에 앞서 1992년 1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같은 해 6월말까지 ‘한일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협의하여 한일 경제인에 의한 경제인포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되었다. 본 회의에 즈음하여 박용학 회장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실천과제 가운데, 한국기업의 대일시장 접근과 관련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문제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 등 양국 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제도 결국은 우리들 민간업계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합동분과회 논의 결과, 양국 간의 투자·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기업이 상호신뢰와 경제합리성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상호이해를 확대시키는 등 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측은 인재육성과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일본측은 투자·기술협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제25회 회의는 지난 해에 한일 양국에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치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가운데 1993년 4월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개회 인사말에서 박용학 회장은 지난 2월 25일 실로 32년 만에 우리 한국에서 문민정치가 회복되어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렸다는 사실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일관계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두 나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확고한 기반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측 하구라(羽倉) 회장은 미국경제 상황과 일본 및 유럽 선진국이 불황에 직면한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발전도상국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속의 한일’과 ‘세계 속의 한일’이라는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합동분과회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육성은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한국정부 및 경제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일본측은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등에 의한 기술인재를 육성, 조연한다는 점에 서로의 인식을 같이 하였다.

1994년 4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제26회 회의에 앞서 1993년 11월에는 1년여에 걸친 ‘한일경제인포럼’의 논의 결과로서 양국 정부에 제언서를 제출하였고, 본 회의 직전인 1994년 3월 하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호소가와(細川)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본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회인사에서 박용학 회장은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남북대화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을 우려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일간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측 기조연설에 나선 삼성그룹의 이진희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개막과 한일경제협력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21세기를 첨단과학에 의한 사회변혁의 시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 공생의 시대,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응비하는데 편견과 과거집착이 더 이상 양국의 공동이륙(共同離陸)의 뒷다리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도시바(東芝)의 와타리(渡里) 상담역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경제협력’이라는 주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한일 무역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이 한국의 산업구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부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러기 위한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 육성과 대한투자촉진에 대해서도 과제와 함께 전망을 밝혔다.

한일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은 1995년 제27회 회의는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인사에서 박용학 회장은 WTO출범으로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구축되어가는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시점에서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상호보완 협조를 유지하면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한국이 1996년 OECD가명을 앞둔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에 대해 축하하면서, 앞으로 양국 경제인 교류가 보다 왕성해져 서로 손잡고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선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자’라는 주제강연에서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여 ‘아시아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한국이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이 같은 새로운 선택이 두 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선린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이란 대전제아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동성명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일 양국은 APEC발전에 대한 협력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과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지향한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개선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측에서는 산업구조 개선과 기술개발력 향상 등에 종전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며, 일본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수입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1996년 4월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개최된 제28회 회의 개최인사에서 박용학 회장은 양국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견중소기업의 조속한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는 한국기업의 성장에 주목하며,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을 흡수·합병한다든지 일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한국이 대일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한일 양국 기업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등 기존의 수직분업 형태에서 수평분업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양국 경제인은 기조연설 및 무역, 산업협력, 교류증진의 각 분과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인식을 같이 하였다. 첫째 ‘활력 있는 글로벌 국가’를 지향하는 일본과, OECD가입을 계기로 ‘21세기의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구축중인 한국, 두 나라 모두에게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은 스스로의 장래를 개척하기 위한 과제이다. 둘째 양국 기업의 수평적·보완적인 분

업체제와 제후관계, 한국기업과 제품의 적극적인 일본시장 진출 등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는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실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장경제원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셋째 중소부품산업 및 소재산업의 육성은 한국산업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바, 기술인력의 육성·경영관리기법의 보급 등을 통해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이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넷째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이니셔티브, 지역경제권의 충실화와 확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물류의 국제화 등 개별 기업차원을 넘어서 민간경제단체가 주도해야 할 분야가 많다.

1997년 4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29회 회의에서 박용학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개최지 부산을 근거지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한일교류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협조를 통한 질서 있는 경쟁의 정신’에 따라 한일경제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는 한국의 OECD가입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양국은 아시아의 두 선진국으로 미래를 향해 협력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양국 간 관계의 틀을 초월해서 널리 아시아태평양의 안정적 발전을 리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각의 분과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첫째 세계경제의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양국이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시한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철폐, 고비용 구조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스스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임을 인식하여 양국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확대하고 있는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은 확대균형 방향으로 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소재·자본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일수출 확대 노력을 하고 일본도 기술이전, 수입확대, 시장개방 촉진에 협력한다. 셋째 양국 간의 투자·기술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관계의 조성이 그 기반이 된다. 넷째 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제품·부품의 표준화, 물류 조건의 개선, 지역 경제권의 충실화와 교류 확대,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대응, 에너지 개발과 확보, 월드컵 공동개최 등에 양국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표4-7〉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개최 요약 1988~1997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치사항
20회 카나자와 1988.04.07 ~ 04.09	한국 97명 일본 1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협력 2. 일본의 경제구조 조정과 한국 및 NICs ◎ 투자기술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산업기술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망 2. 투자 및 기술협력 : 미츠비시와 현대자동차사례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중교역전망과 일본의 역할 2. 일본 무역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 제15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제8회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 제6회 중소기업협력 전문위원회 ◎ 방일 한국투자유치단 37명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53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미션 73명 ◎ 한일시장협의회 수출촉진단 8회 파견 ◎ 청소년 교류 : 대학생 44명 방일
21회 서울 1989.04.25 ~ 04.27	한국 131명 일본 1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와 금융시장 개방 2. 일본 유통업계의 한국제품에 대한 대응 ◎ 투자기술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평양 시대의 한일 기술협력 2. 투자 기술협력의 방향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북방교역 2. 지역적 경제통합과 일한 경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회 기계공업협력 전문위원회 ◎ 제16회 무역확대균형위원회 ◎ 경제협력장기구상 연구위원회 해산 ◎ 제7회 중소기업협력 전문위원회 ◎ 방일 한국투자유치단 37명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64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촉진단 41명 파견 ◎ 수출촉진단 5회 파견 ◎ 방한 중소기업협력미션 유치 ◎ 대학생 교류 : 한 53, 일39 상호방문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치사항
22회	고베 1990.04.16 ~ 04.18	한국 102명 일본 1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 경제의 노사문제와 향후 전망 2.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 투자기술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정세 변화와 한일 기술 및 투자협력 2. 한일 산업기술 협력의 현황과 방향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후 국제무역에 있어 한일의 역할 2. 일본의 소비동향과 한국 상품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17회 무역위원회 ◎ 제8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49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촉진단 39명 ◎ 한일시장협의회 수출촉진단 5회 파견 ◎ 대학생 교류 : 한 50, 일30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20명
23회	서울 1991.09.18 ~ 09.20	한국 114명 일본 1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환경오염 현황과 정책방향 2. 한국경제의 중장기 정책과제 3. 한일 지역간 교류의 촉진 4. 일본 호텔업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5. 한일 무역불균형과 환율 ◎ 투자기술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북아시아의 한일 간 기술협력 2. 한일 상호 기술교류 -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3. 일본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무역 확대와 균형을 향하여 2. 한일무역의 장기전망 3. 아시아 NICs 상품과 일본의 소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18회 무역위원회 ◎ 제9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1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중소기업자동화기술연수 35명 ◎ 방일수출촉진단 5회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38명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24명 ◎ 청소년교류 88명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 치 사 항
24회	센다이 1992.04.22 ~ 04.24 한국 85명 일본 1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간 투자환경 변화와 교류의 중요성 2. 한일 문화교류와 기업의 공헌 3. 동북 지방과 한국간의 경제교류와 전망 ◎ 산업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간의 새로운 기술협력 2. 일본의 물류의 현황과 향후 전망 3. 산업일반위원회 Task Force 보고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무역현황과 과제 2. 아시아에서 한일 경제관계 3. 최근 한일 무역불균형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18회 무역위원회 ◎ 제10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2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방일수출촉진단 5회 237명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38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촉진단 66명 ◎ 대학생 교류: 한 49, 일25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23명
25회	경주 1993.04.15 ~ 04.17 한국 140명 일본 14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일 기능공 협력의 경험 2. 한일·일한 경제인포럼에 관하여 3.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일본 연수 4.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 재단 ◎ 산업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의 산업조정과 한일협력 과제 2. 환경보전과 기업의 역할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산업협력 방향 2. ASIA에 있어서 한일경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19회 무역위원회 ◎ 제11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3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방일수출촉진단 4회 197명 ◎ 한국 기술자 일본연수 138명 ◎ 방일 부품개발협력 촉진단 45 ◎ 대학생 교류: 한 43, 일33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19명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치사항
26회	후쿠오카 1994.04.14 ~ 04.16	한국 103명 일본 14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양국의 지방간 교류와 전망 2. 큐슈, 야마구치 지역과 한국의 교류 3.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증진교육 4. 환경문제 Task Force 결과보고 ◎ 산업기술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산업구조 변화와 효과적 산업기술 협력 2.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와 아시아와의 기술협력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신협력시대의 공존 · 공영을 위한 한일협력 2. 아시아 무역구조의 변화와 한일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20회 무역위원회 ◎ 제12회 중견 · 중소기업위원회 ◎ 제3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방일수출촉진단 5회 164명 ◎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 방일 투자유치단 60명 ◎ 중소기업자동화기술연수 71명 ◎ 대학생 교류 : 한 45, 일32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21명 ◎ 한일경제인포럼
27회	제주도 1995.04.13 ~ 04.15	한국 128명 일본 1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 현재, 미래의 한일 관계 2. 한일 관광산업의 진흥 ◎ 산업기술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기의 한일관계와 한일 기술협력 방안 2. 아시아 지역의 기술협력의 미래상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TO 체제하에서 양국 협력방안 2. WTO 체제하에서 한일 무역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21회 무역위원회 ◎ 제13회 중견 · 중소기업위원회 ◎ 제4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중소기업자동화연수 80명 ◎ 방일수출촉진단 3회 147명 ◎ 방일 투자유치단 109명 ◎ 산업기술교류촉진단 40명 일본 시찰 ◎ 대학생 교류 : 한 40, 일27 상호방문 ◎ 한일중견경제인교류 19명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 치 사 항
28회 니가타 1996.04.18 ~ 04.20	한국 126명 일본 1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1세기 경영가치관과 새로운 한일관계 2. 아시아 물류전개 현황과 과제 ◎ 산업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전자산업의 현안과 협력방안 2. 한일 산업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과제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기의 한일 경제협력 2. 세계속에서 한일 무역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22회 무역위원회 ◎ 제14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5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제2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 방일수출촉진단 2회 74명 ◎ 대학생 교류 : 한 40, 일22 상호방문 ◎ 경제인교류촉진단 18명 방한 ◎ 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 파견 34개사
29회 부산 1997.04.10 ~ 04.12	한국 118명 일본 1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협력 환경변화와 지역간 협력확대 2. 일본에 있어서 경제금융의 구조개혁 ◎ 산업협력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원자력 협력의 미래 2. 21세기를 향한 일본산업 ◎ 무역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협력을 통한 구조조정의 가속화 2.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한일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회 기계공업위원회 ◎ 제23회 무역투자위원회 ◎ 제15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6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 제3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 산업기술교류촉진단 34명 ◎ 일본 한국투자조사단 방한 75명 ◎ 방일수출촉진단 3회 107명 ◎ 방일 투자유치단 74명 ◎ 대학생 교류 : 한 40, 일36 상호방문 ◎ 경제인교류촉진단 35명 방일

4. 지역간 경제협력 채널구축

1990년대 초반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중의 또 한가지는 지역간 협력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지방 분권이 강하므로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대일 경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등 중앙정부를 통한 전국 단위의 경제협력 추진과 병행하여 일본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간 경제협력의 추진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보다 먼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독립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단위의 협력 증진의 문제가 1990년대 초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일경제협회는 1992년 큐슈 지역과의 경제교류회의를 시작으로 호쿠리쿠(北陸) 및 환황해 지역의 지역단위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일본 큐슈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오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일본 어느 지역보다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큐슈 경제권은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생산, 물류, 금융, R&D에 있어서 일본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큐슈 지역은 일본의 4대 공업지역의 하나로 소재형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고도 가공조립산업과 정보관련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일본 전체의 40%를 점하여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고 있을 정도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마쓰다와 혼다 외에 일본의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 등이 후쿠오카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장래 일본 경제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제1회 한일(큐슈)회의 본회의('93)



큐슈회의 투자, 수출 상담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기술, 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고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 교류확대와 지역간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경제교류회의는 한·큐슈 지역간에 수많은 교류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양국의 무역, 투자, 기술협력 촉진에 기여해왔다. 또, 경제교류회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순회 개최함으로써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큐슈 지역간의 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보할 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 교류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표4-8〉 제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의 제의 내용 및 합의사항

4대 제의 내용	
한 국	1) 한일(큐슈) 중견 중소기업간의 산업협력 촉진 2)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 기술자의 큐슈에서의 연수 3) 큐슈지역 퇴직기술자의 한국으로의 초청활용 4) 큐슈지역으로의 한국상품 수출증대
일 본	1) 큐슈의 FAZ(Foreign Access Zone : 수입촉진지역)에 대한 한국의 협력 2) 무역촉진을 위한 견본시 개최에 대한 한국의 적극 참여 3) 지역간 교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측면 지원 4) 환황해 경제권 형성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검토
7대 합의사항	
1) 양측은 한국과 큐슈의 중견 중소기업의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 중소기업관련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산업협력촉진단의 상호파견, 산업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정보교환 등의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한다.	

7대 합의사항

- 2) 한국과 큐슈지역간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먼저 한국측은 큐슈의 FAZ에 대한 정보를 한국국내업체에 널리 홍보하고, 한국경제단체, 기업 등의 큐슈진출을 촉진한다. 또한 큐슈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한국산업분야별 전문전시회의 큐슈에서의 개최 및 큐슈 자연특산품의 한국에서의 물산전 개최에 협력을 검토한다. 한편 큐슈측은 한국상품의 대큐슈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1994년 한국의 대큐슈지역 수출촉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큐슈에서는 한국에 수입촉진단 파견을 검토한다.
- 3) 1994년 기타큐슈국제기술협력협회(KITA)에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의 기술자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측의 시행기관과 KITA는 연수대상, 규모,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 4) 양측은 1994년부터 큐슈지역의 퇴직기술자의 한국에의 초청을 위하여 한국측은 초청희망기업의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큐슈측은 큐슈에 있는 퇴직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등 퇴직기술자 현황을 조사하여 상호 교환한다. 또한 양측은 각기 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동 추진기관으로 하여금 초청조건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큐슈지역의 퇴직기술자 초청 지도사업을 추진한다.
- 5) 한국측은 상호보완적으로 무역, 기술, 투자 등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4년 통산성 큐슈 통상산업국에 설치예정인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에 참여를 검토한다.
- 6) 양측은 한국연안 1개시(부산) 3개도(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큐슈 북부와의 교류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류사업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측면에서 지원한다.
- 7) 이상의 6개 항목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한국과 큐슈지역간의 무역, 산업 및 기술협력관계를 한층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차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를 1994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표4-9〉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경과

구 분	일 시	개최장소	실 적
제1회	1993.11.29	기타큐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 큐슈로 수출촉진단 파견(1994.11, 33개사) 큐슈지역의 산업기술협력단 방한(1994.11, 26명) KITA(기타큐슈 국제기술협회)기술자파견연수 (1994.8~12, 29명) 큐슈지역 퇴직기술자 초청 활용을 위한 현황조사 등
제2회	1995.02.27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 중소기업간 산업협력희망 수요조사(한국 12,000사, 일본 1,511사) 한·일 중소기업 기술교류전 공동개최(한국 28사, 일본 60사) 큐슈백화점협회의 수입촉진단 방한(1차: 1995.5 이즈프야 등 5개 백화점, 2차: 1996.1 이와다야 등 8개 백화점) KITA 기술자 파견연수(1995.9~11, 29명) 큐슈지역 퇴직기술자 초청지도(1995.10~12, 6명) 등 * 특히, 한·일(큐슈) 산업기술협력의 기본 프로그램에 합의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구 분	일 시	개최장소	실 적
제3회	1996.02.13	나가사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중소기업간 산업협력희망 수요조사(한국 12,000사) • 제1차 큐슈의 산업기술협력단 방한(1996.10, 18개사 25명) • KITA 기술자 파견 연수(1996.9~11, 30명) • 큐슈지역 퇴역기술자 초청지도(1996.11~12, 4명) • 환경산업기술협력단 파견(1997.5.20~23, 18개사 25명)
제4회	1997.06.09 ~ 06.11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측 산업협력 희망 수요조사 상호실시 및 자료전달·홍보(1998.4) • 환황해 산업기술페어 참가요청에 대한 긍정적 검토 • 제2차 큐슈지역 산업기술교류미션 방한(1998.3월, 20명) • 큐슈지역 백화점내에 한국우량제품순회전 개최 • 양측 업종별 단체·기업인간 민간교류라운드 개최(1997.6, 전주: 기계, 전기, 목형, 주물, 도금분야) • 대일수출촉진단 파견 및 한국우량제품순회전 개최(1998. 하반기) • 중소기업 기술자연수(KITA, 37명) 및 전문가초청지도(4명) • 투자환경개선, 수입촉진시책 양국내 상호홍보 • 한·일(큐슈) 자매도시간 경제교류회의 개최(1998.2, 46명 참가) • 인천시 주물 금형 기술협력사업 추진(1997.7~12) • 전북·가고시마현과 제3회 경제교류협의회 등 개최(1997.11) • '97 제주물산전 순회개최(1997.6, 후쿠오카 등)
제5회	1998.07.22 ~ 07.24	벳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큐슈)간 산업협력 창구기관 설치 및 협력실무자 큐슈 방문(1998.9) • 수출입관련정보 상호교화(1997.7) • 제2차 한국우량제품견본시 개최 적극 추진 • 제1차 환황해 산업기술페어 참가(1998.10, 110명) 및 환황해 인천세미나 개최(1999.3) • 제3차 산업기술교류미션 방한 및 대 큐슈 미션파견 준비 • 대일수출촉진단 파견 및 사츠마야키축제 • 한국우량제품순회전 등 개최(1998 하반기) • KITA 기술자연수 및 전문기술자 초청지도 • AOTS 연수생 수용기업 조사 및 큐슈측 협조(1998.11) • 구경련 등 투자환경 조사단 방한(1998 하반기) • 큐슈지역 투자환경설명회(1998.7월 벳푸, 후쿠오카, 1998.10월 기타큐슈) • 한일 산업협력 홈페이지 개설 및 큐슈통산국 사이트 개설 • 한·일(큐슈) 자매도시간 경제교류촉진방안 공동연구

5.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을 주도해왔던 한일 양국의 경제인 중 많은 수가 은퇴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을 위한 차세대 육성의 과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의 젊은 경영인들이 선대 경영인과는 달리 일본어 의사소통이나 일본적 경영실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자칫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박영일 단장

박태준 회장의 지적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중견 경영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989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1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안하고 일본측이 수용하여 「한일중견경영인교류촉진단」사업을 실시기로 합의하고, 198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측에서 9회, 일본측에서 5회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를 진행하였다.

박영일 대농그룹 회장,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이 단장이 되어 미래 한일 경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젊은 경영인을 중심으로 미션을 주도해 나갔고, 모리타(盛田) 소니 회장등 일본TOP경영인초청 강연 8회, 경제전문가 세미나 및 패널리스커션 14회, 스터디 투어, 관심기업의 상호방문을 통한 기술제휴와 사업제휴 등 기업간 교류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일본의 중견경영인들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심화시켜 나갔다.



이 미션의 명칭은 1995년 제27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 「한일경제인교류촉진단」으로 변경되고 1998년 제 30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으로, 그리고 2003년 제35회 한일경제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인회의에서 「한일중견경제인교류미션」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실시하다 2004년에 본 교류미션이 사명을 완수했다고 판단하고 양협회 사무국간 협의를 거쳐 제36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발전적 해산기로 합의하고 해산되었다.

〈표4-10〉 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실적

횟수	일시/장소	구 성	주요 내용
1	1989.10/도쿄	박영일 단장 등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竹内 宏 장은종합연구소 이사장 초청 세미나 ◎ 산요증권 딜링룸/도시바 深谷공장 견학
2	1990.10/도쿄	박성용 단장 등 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盛田 昭夫 소니회장 토크영인 강연 ◎ 牧野 昇 미쓰비시종합연구소 회장 초청 세미나 ◎ ODS/후지쯔 시찰
3	1991.11/도쿄	박영일 단장 등 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麻生 泰 아소시멘트 사장 토크영인 강연 ◎ 吉川 弘之 동경대학 교수 초청 경영세미나 ◎ 사프 전자기계사업본부/사가와 유통센터 견학
4	1992.10/도쿄	박영일 단장 등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館 豊夫 미쓰비시자동차공업 회장 초청 강연 ◎ 佐藤 公久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상무 초청세미나 ◎ 일본전기 我孫子사업장/일본통운 시찰
5	1993.10/서울 /대전	박영일 단장 등 27명/ 田中 宏明 단장 등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창순 대신경제연구소 회장 초청강연 ◎ 박우희 서울대 교수/이상우 서강대 교수/勝原 健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부사장 초청 세미나 ◎ 대전EXPO시찰
6	1994.11/도쿄	박영일 단장 등 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三村 康平 미쓰비시상사 상담역 초청강연 ◎ 玉尾 豊光 노무라종합연구소 전무 초청세미나 ◎ 池内 康彦 제일권은종합연구소 이사장/신영무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도시바 京浜주동,과학관 견학
7	1995.10/용평	박영일 단장 등 3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초청 토크영인 강연 ◎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초청세미나 ◎ 패널디스커션/김도형 산업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水戸 秀行 일본경제신문사 지국장
8	1996.10/도쿄	박영일 단장 등 35명 田中 宏明 단장 등 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梅村 正司 닛코증권 상담역 토크영인 강연 ◎ 패널디스커션/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野副 伸一 아세아대학 교수 ◎ 전문가 세미나 原島 望泰 칸다코퍼레이션 사장 ◎ 임해부도심 빅사이트전시장 시찰

횟수	일시/장소	구 성	주요 내용
9	1998.11/광양시	설원봉 단장 등 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초청강연 ● 패널리스트/이종훈 중앙대 총장/千野 境子 산케이신문사 논설위원 ● 광양제철소 시찰
10	1999.11/후쿠오카	설원봉 단장 등 34명/ 麻生 泰 단장 등 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 박수영 선문대학교 교수/임일신 큐슈국제 대학 이사/유화준 현해인클럽 대표 ● 麻生 泰 단장 저택 간친회
11	2000.10/서울	설원봉 단장 등 39명/ 麻生 泰 단장 등 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길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초청토론회 ● 椎野 謙次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초청세미나 ● 송추컨트리클럽 하우스 간친회
12	2001.10/치바	설원봉 단장 등 28명/ 麻生 泰 단장 등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泉谷 直木 아사히맥주 집행임원 초청강연 ● 大室 隆生 전 삼성전자공업 부사장 초청강연 ● 문정익 매디슨재팬 사장 초청세미나 ● 카즈사DNA연구소 견학
13	2002.10/도쿄	설원봉 단장 등 33명/ 麻生 泰 단장 등 4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寺島 實郎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 소장 초청 강연 ● 세미나 高杉 暢也 한국후지제록스 회장/신명식 현대모터재팬 사장 ● 아사히맥주 이바라기공장 견학
14	2003.09/서울	설원봉 단장 등 43명/ 麻生 泰 단장 등 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초청강연 ● 세미나 益子 隆 일본항공 부사장/이윤재 흥아해운 회장

V_소결: 경제협력의 다원화와 제도화

1990년대는 한일경제인회의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과도기적 시기이다. 탈냉전과 지구화와 함께 국내적인 개방화와 민주화가 국내구조와 한일관계의 구속력을 변화시켰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일본의 경제위기로 국내적으로 국가 주도의 정책구조가 변화하였다. 경제개혁과 자유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와 기업간의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였다. 반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면,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의 초국적 이해와 선호가 점차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구조의 다원화는 경제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의 선호와 이익의 분화를 초래하였다. 국제적 측면에서 한일 경제관계의 구속력과 중요도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비정부간 초국적 협의체로서 한일경제인회의의 기능은 변화하였다.

이 시기는 양국 경제구조와 이해관계가 다원화되던 시기이다. 일본경제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세계진출을 확대하였고 1990년대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세계화와 지역화 추세에 따라 일본은 동남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 기업도 동구권과 동남아시아, 세계 각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원화 되었다. 한일 경제협력이 양자적 관계에서 다자적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국 교역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대일의존 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이 추진했던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은 일본경제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심화시켜 왔고 수출증가는 궁극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를 유발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 및 민간차원의 협력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무역불균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21세기 한·일 위원회’, ‘한일경제인포럼’, ‘한일신경제협력포럼’ 등의 특별 협의기구가 설치되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위해서 한일산업기술협력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기술이전과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이러한 협력의 실질적 행정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또, 정부간 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의 구심점으로써 다양한 진전을 이루었다.

Ⅵ_인터뷰: 신덕현 한일경제협회 前 전무이사(1988.2~2001.9)

신덕현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회장은 1981년 협회 설립에 참여한 이래 2001년 전무이사로 퇴임할 때까지 한일 경제협력 현장을 지켜온 실무인사이다. 2010년 10월 20일 신덕현 회장과 김상준 연세대 교수, 조덕묘 한일경제협회 사무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Q. 한일 경제3단체의 건의로 한일경제협회 설립 준비

A. 1981년 한일경제협회는 제5공화국 출범 직전 한일협력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한일 재계의 건의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60년에 일한경제협회를 설립하고 국교정상화 이전까지 한일 재계차원의 협력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가 되자 일한경제협회는 한일 경제협력의 창구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한경제협회는 1969년부터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의 일본측 간사역할을 담당했고 반면 한국은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2년씩 순번제로 담당을 했습니다.

1980년 6월 한국 경제3단체와 일본 경제3단체의 경제정기교류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을 때 당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교류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당시 포항제철 사장으로 재직 중이시던 박태준 회장께서 한일경제협회 설립의 책임을 맡아 그 해 9월부터 저와 이상수 전무, 박대진 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님과 실무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무역협회, 전경련,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협조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대일투자협력과로부터 대일교역과 관련된 600개의 기업 리스트를 받아 이중 200여 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섭외했습니다. 협회 운영자금은 무역특계자금(무역진흥기금)에서 2억 원의 연간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실무준비를 하여 1981년 2월 4일 발기인 총회를 하고 2월 12일 창립총회에서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께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하게 된 것입니다. 출범 당시 사무실은 충무로 극동빌딩에 위치했었습니다.

Q. 제 5공화국의 한일협력의 구심점

- A. 이후 한일경제협회는 한일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설립 직후인 1981년 3월 3일 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 嘉寛 · 1987년 작고) 신일본제철 사장을 비롯한 일본 재계인사 16명의 영접을 담당했습니다. 이나야마 사장은 박태준 회장을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설립직후인 1981년 6월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3회 한일 · 일한 민간합동 경제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1982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14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입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안보경협을 이유로 40억 달러의 경협차관을 일본에 요청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양국 경협을 위해 민간에서도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고 일본측과 협의하여 이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Q.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구체화

- A.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자본 등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역조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특히 무역역조 문제 해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경제기획원과 한일경제협회는 무역역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체적 정책을 협의했습니다. 당시 대만의 일본 수출입 상황을 조사해보니 대만은 한국과 달리 상당 품목에서 대일 수출흑자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일수출 가능 품목을 정하여 적극적인 대일수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10월에는 마쓰오 타이이치로(松尾太一郎) 마루베니 상사 회장을 대표로 하는 대한 수입촉진단 144명이 방한하였습니다. 플라자 호텔에 숙소를 잡고 22층 23층에서는 대일 수출을 위한 상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부산까지 방

문하여 상담활동을 했지요. 1985년 5월 한국에서도 대일 수출촉진단이 파견되었습니다. 120개사 207명이 일본에 가서 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1985년에는 한일·일한 시장협의회가 설치되었습니다.

Q. 미래 한일관계를 위한 인적교류

A. 박태준 회장님은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추진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분의 아이디어와 노력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교류사업입니다. 청소년 교류산업은 한일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간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박태준 회장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미래 한일 경제관계를 담당할 중견 경제인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일중견경제인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일관계의 한국측 중심 인사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미래 한일관계를 준비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과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께서 교류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단원구성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견기업인이 였던 반면 일본은 전문 경영인이었기 때문에 의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한일협력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활동

A. 한일경제인회의(구: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는 1969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양국 재계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경제협력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중견경제인교류사업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일기계공업위원회와 한일무역확대균형위원회는 이미 70년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계공업위원회는 1992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치됨에 따라 기능의 중복 문제가 있었고, 무역위원회는 관세, 특허, 지적재산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권 등의 쟁점들이 해소됨에 따라 이 두 위원회는 한일산업무역회의로 통합되게 되고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일중견중소기업위원회입니다. 양국 간 중소기업 협력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양국 경제제도나 체계상의 차이로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조직이 있는 반면 일본은 동일한 조직이 없어 일한경제협회에서 담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과 특성이 다르다 보니 행정적 업무협조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Q. 한일경제협회의 도약과 전환

A. 그간 한일경제협회에는 많은 변화와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92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치된 것입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 喜一)총리가 한일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구체적 기술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추진이 지연되자 박태준 당시 총재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 登) 당시 일한의원연맹 회장(전직 총리대신)과 담판을 지은 다음 협회로 전화를 걸어와 재단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애초 50억 원의 기금규모로 추진이 되었는데 당시 최각규 경제기획원 장관께서 재계의 협조를 받아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일경제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민과 관에서 연구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는데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한일경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면 한일경제협회가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Q. 한일관계의 미래와 한일경제협회

A. 한일경제협회가 한일 양국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20여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써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다. 현재 운영재원의

문제나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나 한일경제협회의 미래에 대해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협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국 세대간의 인식의 격차를 슬기롭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한국을 좋은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의 중장년 층은 반일 감정이 많고 젊은 세대도 역사인식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캠페인을 통해 인식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이것이 한일경제협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간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박용학 회장님과의 30년

- A. 한일경제협회에서 박용학 회장님을 모시면서 일본 각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박용학 회장님의 헌신과 노력은 한일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86년에서 1992년은 아마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 지방정부에서는 한국과 정기편 개설이 중요한 현안의 하나였습니다. 박용학 회장님께서 10여 편의 직항노선의 성사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미야기현 정기편 개설 후에는 명예현민증을 받기도 하셨지요. 외국인 명예 현민증은 1호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일본과의 교류업무에 평생을 보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회수가 500회에 이르는데 이중 대부분은 일본에 다녀온 것입니다.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했던 지난 업무에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한일경제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5장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1990년대 후반은 한일 양국에게 위기와 개혁의 시기였다. 외환 위기 이후 한일관계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주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간 협력체계의 부재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일본은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외환위기 국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경제위기의 당사국이었던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역시 동아시아 협력체계의 강화를 강력히 주창하였다.

둘째, 대일무역 불균형의 확대이다. 외환위기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해졌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단기적인 성격이라면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증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정부가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기업도 수출을 기업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셋째, 역사논쟁과 정치갈등이다. 대일관계를 중요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개방 등의 조치를 통해 한일교류를 확대시켰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는 포괄적 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증진을 배경으로 2005년은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2005년은 갈등의 해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환위기 한일 경제협력은 외환위기 극복, 지역협력 촉진, 그리고 무역불균형의 해소라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일경제협회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기술협력,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일무역역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I_위기와 개혁의 시대

1990년대 후반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위기와 개혁의 시기였다.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외형적으로는 단기외환 유동성 부족의 문제였지만 기업자금 대출의 부실, 외환자유화에 의한 금융체계의 취약성, 그리고 정경유착 등의 구조적 원인의 결과였다. 더구나 대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구조, 이를 가능하게 했던 폐쇄적 지배구조는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경제위기는 건국 이후 지속되었던 집권여당의 지배를 종식시켰다. 개혁지향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집권은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면서 한국의 개혁과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일본 역시 위기와 개혁의 시대였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와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위기, 정치제도 변화와 선거 등으로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치부문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료는 일본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보다는 재정팽창에 의한 경기부양에 집착함으로써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일본병(Japanese Diseases)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6년 1월 11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郎) 총리가 취임하면서 관료개혁의 일환으로 省과 廳의 개편을 추진하였지만 개혁이 결실을 본 것은 2001년이였다. 2001년 4월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총리가 87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2005년까지 일본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적극 추진되었다.

외환 위기 이후 한일관계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주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간 협력체계의 부재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일본은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외환위기 국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중국 역시 외환위기를 전후로 주변국가들에 대한 경제 및 정치적 포용을 확대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경제위기의 당사국이었던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역시 동아시아 협력체계의 강화를 강력히 주창하였다. 특히 일본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의 요청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한 ‘통상(通商)적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두 번째는 대일무역 불균형의 확대이다. 외환위기로 국내 수요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해졌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단기적인 성격이라면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증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정부가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기업도 수출을 기업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수립하였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대폭 증가하였고 수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25%에서 2005년에는 35%까지 증가하였다.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외경제관계가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셋째, 역사논쟁과 정치갈등이다. 대일관계를 중요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 개방 등의 조치를 통해 한일교류를 확대시켰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는 포괄적 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증진을 배경으로 2005년은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2005년은 갈등의 해로 전략하고 말았다. 영토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고이즈미 총리의 미국 중시 외교태도로 인해 양국 관계는 극도의 긴장관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일 경제협력은 외환위기 극복, 지역협력 촉진, 그리고 무역불균형의 해소라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기술협력,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일무역역조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쌍무적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산업협력을 위한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연대협정(經濟連帶協定,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의 확대 및 ASEAN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II_1997년 외환위기와 대일경제관계

1. 외환위기의 원인과 경제개혁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국가는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은 경제기획원, 산업자원부 등 효과적인 선도기구들이 조직하여 실행했다. 국가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절연(insulated)되어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했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고 배분하기 위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지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기업, 정당 등과 ‘발전을 위한 연합(聯合)’을 조직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는 보수정권과 발전패러다임(developmental paradigm)의 위기를 초래했다. 외환위기는 국가주도의 발전모델에 대한 위기였고 이로 인해 50년 동안 계속되었던 보수여당의 지배가 최초로 종결되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권교체 후 발전패러다임을 대체한 것은 신자유주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토록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인사로 유명했다. 그는 대중경제론에서 소위 ‘민주적 자본주의’를 주창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위기이자 정치적 기회를 통해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경제개혁의 이념으로 삼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560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IMF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강요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요구했고, 경제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억제하고 각종 규제의 자유화를 요구했다. 무역,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유화도 요청되었다.

둘째 이유는 국내적으로 국가기능의 축소라는 정치적 요구에 있다. 민주화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라는 인식과 동일시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시장개입과 인위적 규제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가 발전국가를 대체하는 정책이념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1)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치 : 경제/노동 개혁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적 발전모델의 한계를 의미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초래한 국가, 기업, 그리고 사회부분의 비효율을 개혁하는 것은 우선적 과제였다. 이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경제구조를 고도화 시키는 것, 국가의 인위적 경제정책 관행의 개선이 세부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초래하는 정치적 편익의 재분배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심화시켰다. 이념지향의 정치논쟁은 명시적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빠른 시간 내에 환율을 안정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시켰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여 외환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경제협력 회복을 위해 대출완화와 신용카드 발급완화 등 국내소비 진작정책을 시행하고, 벤처투자 진흥정책, 해외자본 유치와 건설경기 부양 조치를 취함으로써 1998년 -6.9%였던 경제성장률이 1999년도에는 9.5%로 신속하게 정상화 되었다. 비싼 유가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물가상승률을 평균 3.5%로 유지함으로써 경제안정화에 기여했다.

기업부와 금융부문의 개혁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업도산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융시장의 마비를 초래하여 연이은 기업도산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경유착에 있었다. 국가와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인 장치들이 제정되었다. 또, 기업과 금융기관이 시장원칙에 의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 다변화 제도'를 폐지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등 시장경쟁제도를 제고하였다. 외부감사제도를 도입,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상장기업의 반기보고서와 전자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상장법인 등의 사회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은 물론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시장 통제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기업경영 개선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과 금융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은 노동부문의 개혁을 동반해야 했다. IMF 구제금융의 전제로 제시된 노동부문의 유연화와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초래할 대규모 실업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협약을 시도하고 한편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노력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 상징적인 의미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률의 차이, 대립적 노사문화,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전환적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활동과 성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국가주도적 경제정책과의 단절에 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 아닌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삼았다. 경제통제를 담당하던 중앙행정부서를 개편하였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증권집단 소송제, 기업지배구조개선,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운영을 정착시켰다. 대외적으로는 개방경제를 지향하였고 공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인 ‘외국인투자처’를 설치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저생산 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기 평균 GDP 성장률이 4.4%였고 참여정부 시기의 평균은 4.3%성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0%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고 수출은 연평균 19% 이상 증가하여 2006년에는 3,7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수출 증가율은 민간부문 신용위기로 인해 2003년 실질 민간소비증가율이 -1.2%로 하락하고 2006년까지 평균 1.5%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경기여건과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급등으로 인한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실업률은 국민의 정부 시기 평균 5.0%, 참여정부 시기 3.6% 수준으로 평균 실업자 수는 각각 109.9만 명과 84.8만 명으로 회복이 지연되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국민의 정부시기 9.2%였지만 참여정부 시기에도 8.1%로 그 개선이 지연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노태우 정부 시기 12.1%, 김영삼 정부가 7.9% 였던 것에 비하면 국민의 정부에서 0.6%, 참여정부에서는 3.9%에 머물러 설비투자 지연으로 인한 실업문제가 지속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2) 경제개혁을 둘러싼 논쟁과 ‘성장동력’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하여 10가지 항목,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실업과 양극화를 통해 ‘차별 없는 침체’를 초래하고, 세금폭탄 정부, 기업의 투자기피와 청년백수의 문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들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제도의 확충과 예산 증가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이 고용수요와 연계되지 못하고 실업해소,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빈곤극복, 궁극적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회복지의 확충이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사회투자정책으로서의 제도확충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다.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위기담론이 지속되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소비진작을 통한 성장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신용위기를 초래했다. 참여정부 초기 실질 민간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가 가중되었다.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수출증가는 수출과 내수 분야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 신규고용창출이 지체되어 실업률이 지속되었고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규모로 증가했고 노동 부문의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 수도권과 지방의,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심화되는 경제 구조적 양극화는 정치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 담론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소위 ‘신성장동력’ 담론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upgrading)와 경쟁력 확충을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2001년에는 부품소재산업을 차세대 핵심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3년 신성장동력 10대 산업을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신산업정책은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하던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기술개발협력에 있어서 각기 민간주도, 정부-민간 협력, 정부주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민간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 정부는 산업주체간 협력의 조정자(coordinator)로서 산업연관체계(industrial network)를 형성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산업전략의 추진은 부상하는 중국시장을 기회로 활용하고,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의 해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지속한다는 정책목표에 의한 것이었다.

2. 대일 경제정책의 기조와 정책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일 경제정책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외환위기는 외화 유동성 부족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전성이 증가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확산되자 외화유출이 급증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급증하였다. 환율상승이 일일변동 상한까지 상승하면서 외환시장 기능이 마비되고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대외적인 결제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IMF에 21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협정(stand-by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세계은행으로부터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과 40억 달러의 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233억 달러의 지원약속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신용을 회복하고 외환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양자간 협력이 아니라 다자적인 틀에서 한국의 지원요청을 수락했다. 외환시장이 급박하게 요동치던 1997년 11월 11일 재정경제원 엄낙용 차관보는 일본 대장상에게 유동성 지원 및 AMF에 대한 입장을 타진했다(국가기록원). 이에 대해 대장상은 일본도 현재 어려워 큰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상업 차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약속했다. AMF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일본은 IMF 구제금융이 체결된 직후 미국과 함께 233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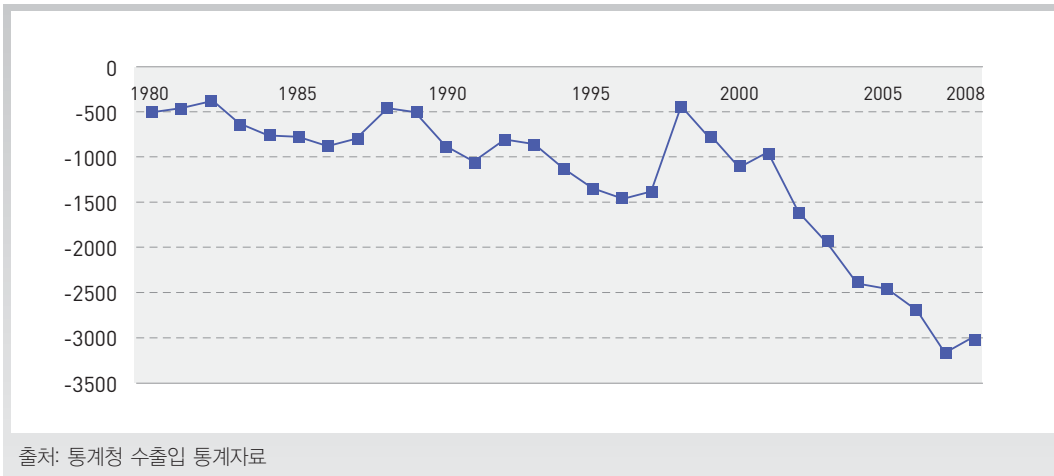
〈표5-1〉 외환위기 전후 대일 수출입 증가율 현황 (억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적자
	금 액	증가율	비 중	금 액	증가율	비 중	
1990	126.4	6.1%	19.4%	185.7	6.5%	26.6%	-59.4
1995	170.5	26.1%	13.6%	326.1	28.4%	24.1%	-155.6
2000	204.7	29.0%	11.9%	318.3	31.8%	19.8%	-113.6
2002	151.4	8.3%	9.3%	298.6	12.1%	19.6%	-147.1
2003	172.8	14.1%	8.9%	363.1	21.6%	20.3%	-190.4
2004	217.0	25.6%	8.5%	461.4	27.1%	20.6%	-244.4
2005	240.3	10.7%	8.4%	484.0	4.9%	18.5%	-243.8

출처: 한국은행

한편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대일 교역비중은 감소하면서 무역적자는 증가하는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대한 교역비중은 감소하여 1990년 대일 수출이 19.4%, 수입이 26.6% 였지만 2005년에는 각각 8.4%와 18.5%로 감소하였다. 수출비중은 두 배 이상 감소하였지만 수입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이는 중국시장과 제3세계에 대한 교역비중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역조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1990년도에 59억 달러였던 대일무역적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05년에는 243.8억불까지 증가하였다. 수출이 연평균 19%씩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되었지만 대일 무역적자는 점차 증가하는 불균형구조가 심화된 것이다.

〈도표5-1〉 대일 무역적자 추이 (단위: 십억엔)



수입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수출이 대일수입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1999년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일수입은 더욱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수출은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대기업 중심의 소수 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부품소재 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지체되었다. 외환위기로 기업경영의 위기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개발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표5-2〉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적자 추이 1996~2008

구 분	부품소재(A)	대일적자(B)	비중(A/B)
1996	-110	-157	70.1
1997	-98	-131	74.8
1998	-62	-46	133.8
1999	-97	-83	117.5
2000	-115	-114	101.4
2001	-103	-101	101.7
2002	-118	-147	80.1
2003	-139	-190	73
2004	-159	-244	64.9
2005	-161	-244	65.9
2006	-156	-254	-61.3
2007	-187	-299	62.5
2008	-110	-157	70.1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년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경제활력과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부품·소재 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2015년까지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목적은 가공 조립국에서 부품소재 공급국가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내 고용과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대일 무역불균형 구조 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참여정부는 신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산업분야 육성 전략으로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 차세대 이동통

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신약 등의 10개 산업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정부 1조 5,550억원, 민간 7,238억원 등 총 2조 2,788억원을 투자하였다. 정부투자가 민간 투자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신성장동력 사업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었다(Moon and Yoon, 2011).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였다. 1970년대는 국가주도로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면서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하에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도 해외로부터의 기술 및 자본도입을 촉진함으로써 대형 조립산업이 발전하였다. 1980~90년대는 수입선 다변화제도와 두차례에 걸친 국산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다. 1987년부터 95년까지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및 ‘자본재산업 육성대책(95~99)’이 추진되었지만 과도한 시장보호에 따른 경쟁력 하락과 융자에 치중함으로써 원천기술 확보보다 외국기술 도입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품소재산업 개발 및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시장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원천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기업, 민간부문의 통합적 협력은 물론 사업화를 위한 사후지원까지 모색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와 지속성장과 관련된 국내 논쟁 가운데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한일 간의 협력관계도 발전하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동 개최와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 정책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7일부터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오부치 케이조 총리와 회담 후 ‘21세기의 새로운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는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 5개항 43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전까지 합의된 실천계획이 경제분야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와 국제평화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큰 변화였다. 우선 양국 대화 채널 확대를 위해 정상회담을 1년에 한번으로 정례화하고 각료회담과 소장파 정치인 간의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또 국제평화를 위해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일본 수출은행의 차관제공에 합의하는 한편 향후 10년 동안 1천명의 공과대학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또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위해 문화부문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Ⅲ_일본의 경제개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1. 잃어버린 10년 이후 일본의 경제개혁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1993년에는 기존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했다. 이로써 자민당은 55년 체제 이후 최초로 원내 다수당의 위치를 상실하고 연정체제를 수용해야 했다. 1993년 비자민당 연립정부의 수립으로 1994년 6월까지 야당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후 자민당은 정치가에 의한 사회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전까지 관료주도의 개혁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55년 체제의 붕괴로 정-관 관계가 변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개혁의 핵심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였다. 1996년 11월 7일 출범한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은 “변혁과 창조”를 슬로건으로 행정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개혁, 사회보장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 등 6대 개혁과제를 채택하였다. 하시모토 내각의 개혁은 1955년 체제 성립 이후 역대 내각이 추진했던 것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1980년대 나카소네 수상이 추진한 개혁도 실제로는 재정개혁이 중심이었고 중앙 성청(省廳)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다. 중앙정부 조직이 대폭 개편되고, 수상주도의 내각기능을 강화하며, 지방분권화 등이 상호 연동되어 포괄적으로 추진된 것은 하시모토 내각에 의해 추진되었던 개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하시모토 내각이 추진했던 개혁의 핵심은 첫째, 중앙성청의 슬림화와 효율화, 둘째, 내각기능의 강화다. 1부 22청이었던 중앙 성청(省廳)은 2001년 1부 12청으로 축소개편되었다. 막대한 정책영향력을 행사하던 대장성은 각각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각각 재정 및 금융정책 관련 업무가 분리되었다. 공무원 수도 향후 10년간 25%를 삭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0여개에 달하는 공적기관은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총리 대신이 내각의 수반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각의 실질적인 정책논의 기능을 강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각부의 설치와 기능강화였다. 대장성이라는 거대 관료집단에 의해 주도되던 정치가 정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었다.

사회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와 법제화가 실행된 것은 2001년이였다. 그리고 2001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취임하면서 개혁은 가속화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을 바꾼다. 정치를 바꾼다. 자민당을 바꾼다”는 구호로 정치에 진출했다. 정치적 파벌의 지지나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던 고이즈미 총리의 출현은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파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고이즈미 총리는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중의원의 영향력과 금융기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했고 재정개혁을 이루었으며, 특히 2005년에는 최대의 쟁점으로 손꼽히던 우정공사의 민영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사실상 일본 경제시스템의 획기적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추진했던 개혁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취임 초기 금융개혁이 지체되면서 1999년 18,934였던 닛케이 지수(Nikei)는 2001년 10,542, 2002년에는 8,578까지 하락하였다. 고이즈미의 개혁이 금융공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2002년 부실채권 청산과 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2005년에는 16,111까지 상승하였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과 1999년 각각 -2.0%와 -0.1%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1.4%, 2.7%, 1.9%의 실질 GDP가 성장하였다.

〈표5-3〉 일본의 경제지표 1995~2007

(단위 : 10억 엔)

구 분	경 상 수 지							
	총 계	무 역 및 서 비 스 수 지					소득수지	이전수지
		소 계	무 역 수 지			서비스		
			소 계	수 출	수 입			
1995	10,386	6,955	12,345	40,260	27,915	-5,390	4,157	-725
2000	12,876	7,430	12,372	49,526	37,154	-4,942	6,505	-1,060
2004	18,618	10,196	13,902	58,295	44,393	-3,706	9,273	-851
2005	18,259	7,693	10,335	62,632	52,297	-2,642	11,382	-816
2006	19,849	7,346	9,464	71,631	62,167	-2,118	13,746	-1,243
2007	24,794	9,825	12,322	79,725	67,403	-2,497	16,327	-1,358

자료출처: 일본무역진흥협회(JETRO)

2. 일본의 지역주의 정책과 대한 경제협력

한편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방향도 변화하였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전후 처리가 완결된 1952년 이후부터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포용전략을 추진해왔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은 전후 문제의 처리와 경제협력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확대하면서 경제협력을 증진하였고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는 마무리될 수 있었다. 또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외협력을 증진시켰다. APEC 등의 지역협력 체제 창설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주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추진하였고, APT(ASEAN+3) 및 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를 통해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쌍무적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sia Monetary Fund, AMF)을 구상하였다. APEC이 형성되어도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해결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7년 중반부터 일본의 AMF 구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상은 ASEAN 재무장관 회담 등의 지지를 거쳐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배타적 지역 금융기구의 설립에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의 AMF 구상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AMF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1998년 10월 신미야자와 구상을 발표하고 2년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엔 차관을 아시아 국가에 지원하기로 하였다(진창수, 2006). 한편 1997년 12월에는 최초 APT 정상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됨으로써 아시아의 지역주의 협력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2000년 5월에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PT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역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이 제안되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09년 양자간 통화 스왑을 제공하는 공동펀드로 제도화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기구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2005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새로운 분수령이 되었다. EAS의 기본 구상은 APT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16개국의 정상회의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APT가 미국을 포함하는 16개국 정상회의로 확대되는 데에는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일본, 특히 고이즈미 내각의 이러한 선택은 동아시아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 협력구조라는 유산 때문이었다(김기석, 2007).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대외정책은 미국에 편중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과의 전통적 안보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치중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적극 협력하면서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되었다. 이는 1991년 걸프전쟁에서 엄청난 규모의 전비를 부담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소위 우파 정치세력에 의해 보통국가(normal state)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헌법 제9조 개정, 자위대의 위상과 관련된 법개정, 교과서 문제, 영토분쟁 등의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더구나 한국,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계속되면서 한일, 중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되었던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킨 직후 국가안정보장회의(NSC)는 3월 17일 대일외교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4대 기초와 5대 정책방향을 담은 대일독트린은 일본의 영토 및 역사 문제에 대해

소극적 대응에서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3일 일본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가 국내용이라고 폄하하면서 사실상 참여정부 말기까지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했다. 일본의 역사논쟁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비판을 초래하면서 고이즈미 총리 재임시절 동아시아 협력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충분히 진전될 수 없었다.

〈표5-4〉 NSC 대일외교 4대 기조와 5대 방향(2005.03.17)

4대 정책기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식에 기초한 한일관계 2. 독도, 과거사 문제 제기 등 식민지 침탈 정당화에 대해 단호히 대처 3.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의 태도변화 촉구 4. 기존 정치 외교적 교류 지속, 경제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증진
5대 정책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도 영유권 확고히 수호하는 조치 2.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 바로잡기 위한 가능한 수단 동원 3. 일제 피해자 문제 등 일본의 책임 인식 필요 4. 이웃나라의 신뢰가 유엔 등 국제사회 지도국 일본으로서의 자격 5. 인적 문화적 교류 및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강화

IV_한일경제협회와 양국 경제협력

외환위기 이후 양국에서 경제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일경제협력에 있어서 한일경제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대일 교역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반복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일경제협회는 경제인교류, 기술협력, 인적 교류를 중



제7대회장으로 선출된 김상하 회장
(옆은 일한경제협회 후지무라 마사야 회장)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심으로 한일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한일경제협회의 큰 변화는 김상하 삼양그룹 회장이 1998년 2월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들 수 있다. 김상하 회장은 한일경제협력에 오래 전부터 관여해온 중요한 인사중의 한 명이었다. 한일경제협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한일경제인회



31회 경제인회의 공동성명안 조정중인 단장단('99)

의 등을 통해 한일관계에 참여해왔다. 1980년대 양국 정상이 신 한일시대를 선포하고 한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1세기 한일위원회', '한일경제인 포럼', '한일신경제협력 포럼' 등의 별도 기구를 설치할 때에도 위원의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외환위기가 시작된 직후 김상하 회장이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데에는 한일경제관계에 있어 그의 연륜과 경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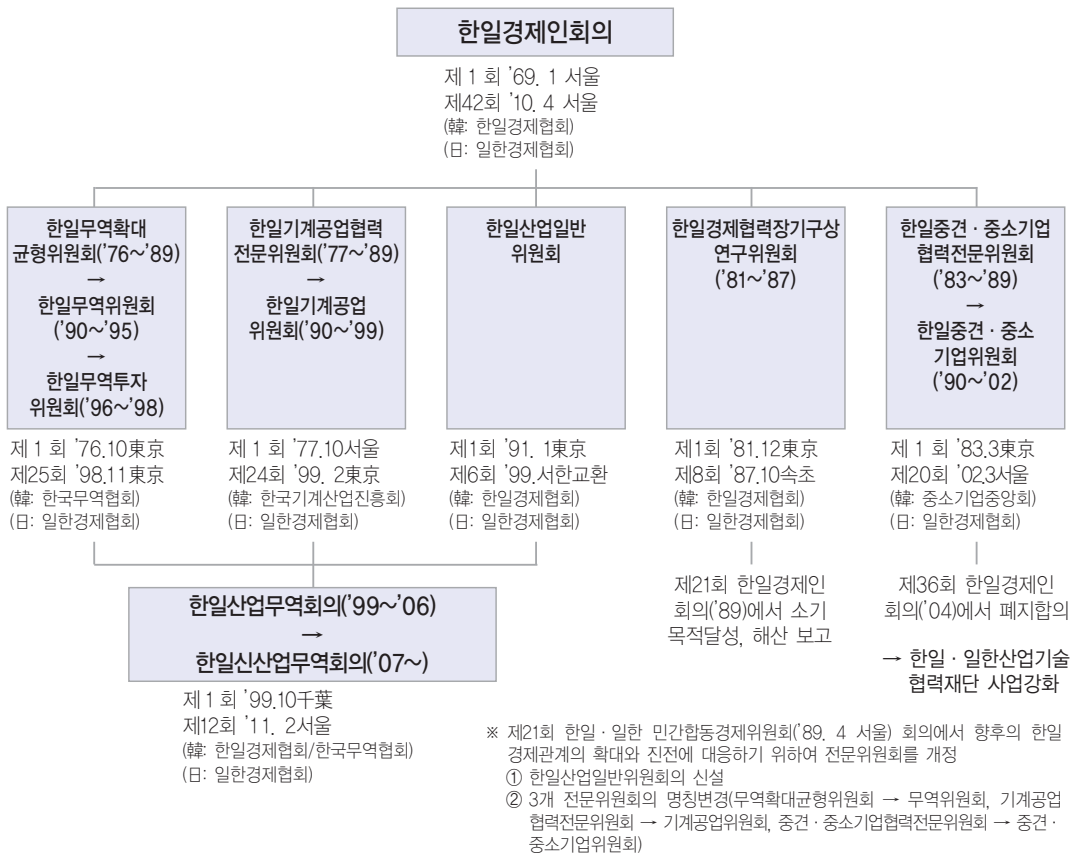
김상하 회장은 한일교류 확대에 대한 그 동안의 공로가 인정되어 2001년 11월 일본정부로부터 훈일등서보장(勳一等瑞寶章)을 수상하였다.

1. 한일경제인회의

1998년 이후 한일경제인회의는 조직상의 변화가 있었다. 한일경제인회의에는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왔다. 무역투자위원회는 1976년부터 1998년까지 25회 개최되었고, 기계공업위원회는 1977년부터 99년까지 24회의 합동회의

를 개최해왔다. 산업일반위원회는 1991년 발족되어 한일 민간경제관계 발전과 협력에 기여해왔다. 1998년 제30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경제의 글로벌화와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3개 전문위원회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1998년 7월 일본측으로부터 새로운 위원회 설립안에 대한 제안서가 한국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일경제협회 등은 3개 위원회를 ‘산업무역회의’로 통합하는데 합의하였다. 2004년 개최된 36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력전문위원회와 한일 중견경제인교류미션이 발전적으로 해체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는 한일산업무역회의로 통합, 단일화되었다.

〈도표5-2〉 한일경제인회의의 위상과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2000년대 한일경제협회 사업의 통합 및 조정은 한일경제관계의 변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1970년대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한일경제협회의 전신)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계획에 따른 자본, 기술, 인적자원의 교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80년대에는 양국 정상회담의 성사 이후 자본, 투자, 기술 등의 부문에 있어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민간교류의 창구로서 한일경제협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고 한일경제인포럼, 한일21세기 위원회 등의 특별기구 등이 설치됨으로써 한일경제협력은 촉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한일경제협회의 사업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경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중은 축소되는 한편 아시아 및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무역불균형과 부품 및 소재, 기술의 의존이 심화되었다. 기능적 통폐합은 전문위원회의 기능적 한계와 새로운 기업환경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는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기술 협력사업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일경제인회의는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산업무역회의로 통합하였다. 대신 한일경제인회의는 2개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로 구성되어 경제환경에 따른 유연한 협력의 과제를 회의의 의제로 설정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일경제인회의가 국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의 네트워크 가운데 한일협력의 정책적 의제를 논의하는 장이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실질적인 민간차원의 협력의 창구로서 다양한 협력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써의 기능적 측면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에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는 제30회 회의를 맞아 새롭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8년 4월 미야자키(宮崎)에서 개최되었다. 새롭게 한국측 대표로 취임한 김상하 회장은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124명에 이르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출석하였으며, 일본측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개회인사에서 김상하 회장은 현재 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이럴 때 일수록 한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좋은 조언을 듣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일본측 후지무라(藤村)회장은 한국이 여러 다양성을 근거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

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과 함께, 양국이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기조연설에 나선 구평 회 한국무역협회회장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과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더불어 일본정부와 일본금융기관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다. 양국은 기조연설과 각 분과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아시아 경제의 재건을 선도하기 위하여 양국은 종전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였다.

제3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1999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21세기 아시아의비전과 한일협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한일FTA가 양국의 협력관계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조기에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는 우시오(牛尾) 경제동우회대표간사는 ‘경제개혁과 한일협력’이라는 주제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이번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지원(100억 달러의 IMF협조지원, 1,300억 엔의 수출입은행융자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역·투자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상호협력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일FTA의 전향적인 검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각 분과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현재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경영자세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양국 고유의 보다 유연한 경영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시장경제체제 아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책임은 어디까지나 민간에 있으며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기존의 룰이나 제도는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새로운 천 년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제32회 회의는 2000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김상하 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 오부치(小渕) 당시 총리와의 교환방문을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연대관계가 확립되어 굳건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었으며, 회의 개최 3일전 모리(森) 총리의 방한으로 상호신뢰와 협력관계의 기반이 더욱 확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고해졌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새천년 아시아 경제비전을 위한 한일경제인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운명은 새롭게 개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대한 비전으로 새 산업을 창조하고 선진국과 경쟁을 하면서 아시아 전체를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아시아 역내에서도 자율적인 성장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경제질서 형성에 아시아의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양국 경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기본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첫째 한국 경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비롯한 시스템개혁, 기업경영의 개선과 투명성 확보, 규제 완화 및 철폐 등 민관합동으로 구조개혁의 노력을 한 결과, 소비·투자·수출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으며, 일본경제는 민관 모두가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선명해지고 있다. 둘째 올해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제권 안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분업구조를 추구하고 디지털·네트워크 경제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경제인의 목표이다. 셋째 동아시아지역의 연대와 협력의 선봉이 될 수 있는 한일FTA 구상이 장래 실현될 것을 상정해 투자협정교섭 등 그 기초가 될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물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양국 경제인들이 협조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1년 4월 광주에서 개최된 제33회 회의에서는 한일FTA의 검토와 조기타결을 주제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개회인사에 나선 김상하 회장은 제조업에서의 IT활용과 한일협력을 통한 양국의 구조조정 등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더불어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경제인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탄탄한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일본측 후지무라(藤村) 회장은 지난 1월 26일 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김수현 씨의 숭고한 죽음이 한일 우호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일FTA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지난 해 정상회담에 근거한 한일

비즈니스포럼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IT분야에서의 협력,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 한일FTA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각 분과회와 전체회의에서의 의견발표와 토론을 통해 양국 경제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첫째 IT산업,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은 향후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기업경영, 개인생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 및 행정서비스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둘째 국제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공정한 시장을 실현하고 기업이 국제적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업은 자율과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부품·소재산업은 구조조정에 있는 한일 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은 양국이 계속 갖고 가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넷째 한일 지역간 교류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후쿠오카 현의 사례와 오랜 경험은 향후 지역간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2002년 4월 일본 히로시마(広島)에서 개최된 제34회 회의는 1개월 전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었고, 한일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설치가 합의되었으며, 한일공동월드컵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양국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상하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정치·외교·문화 측면에서 몇 차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인들 사이에서만은 단 한차례의 상충도 없이 이제까지 매년 상호 협력하는 원만하고도 협조적인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측 기조연설은 한국 무역협회 김재철 회장이 하였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방향’이라는 제목 하에 다국간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IT버블 붕괴에 따른 미국경제의 부진이 한일경제에 미치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한편 각 분과회와 전체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첫째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양국기업에 있어 유망한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한일 양국에 있어 향후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둘째 한일FTA는 한일산업협력을 더욱 확대시킬 최선의 선택이며 양국 경제나 양국 경제관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효한 수단이다. 셋째 한일 양국의 다양한 문화는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질적·양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세 차례에 걸친 일본의 대중문화개방은 양국 국민의 우호친선과 신뢰관계를 촉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넷째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적교류와 문화교류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긴밀화되고 있다.

2003년 4월 제35회 회의가 개최되기 2개월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취임식 이후 고이즈미(小泉)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간의 연대강화가 확인되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개최된 35회 회의의 개회인사에 나선 김상하 회장은 우선 대구 지하철 사고의 희생자에 대해 일본측 대표단으로부터 전달된 위로금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일간 투자교류 활성화와 양국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한일FTA체결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이 힘을 합쳐주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측 기조연설에 나선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21세기의 동반자적 한일관계의 진전을 위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를 지적한 후, 한일FTA 체결시의 부정적 영향에 집착하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한일FTA를 자국의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세계 제일의 기술대국 일본이 양질의 한국인재를 주목해서 투자를 확대하여 Win-Win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각 분과회와 전체회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첫째 한일 양국은 투자협정 체결뿐 아니라 FTA의 조기체결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한일 기술교류 및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토양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양국 기업들은 동등한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사업의 수평·수직분업을 도모하여 제3국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무역·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최근 중국 등 동북아시아권의 물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물류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 물류기업 간 협력은 필연적이며 양국 기업간 전략적 업무제휴 및 물류 파트너십 구축, 다국간 물류사업의 추진, 물류 표준화의 공동추진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망된다. 넷째 이러한 양국의 무역·투자·산업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경제계가 하나가 되어 FTA의 조기체결에 노력하고, 기업은 공존공영의 Win-Win 관계가 바탕이 된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2004년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개최된 제36회 회의에서 김상하 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세계적 규모로 진행중인 FTA체결 현상을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이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은 ‘동아시아의 역내협력과 한일관계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일FTA의 정부간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FTA의 자유화 수준 등에 관해 양국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한일FTA가 원만하게 타결되기 위해서는 FTA체결을 우려하는 산업 부문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각 분과회와 전체회의에서 양국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 일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경제인은 한일FTA의 체결을 염두에 두면서 양국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한일 양국은 중국 경제의 대두로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일부 산업에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양국 경제인은 상호 직접투자의 환경 정비와 확충, 무역의 확대균형, 중층적인 인적·문화교류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긴밀화의 정도를 더욱 더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넷째 한국측으로부터 혁신주도형 산업정책과 한일경제협력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일본측으로부터 한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언이 있었다. 또한 2005년 일본국제박람회협회로부터 국제박람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양국 경제인은 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표5-5〉 한일·일한 경제인회의 개최 요약 1998~2005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치사항
30회	미야자키 1998.04.16 ~ 04.18 한국 124명 일본 1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변화된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제2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산업기술 협력의 과제와 전망 한일산업의 글로벌화와 2개국간 경제관계 변화 합동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무역현황과 협력방향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무역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회 기계공업위원회 제24회 무역투자위원회 제16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한일산업일반위원회 국내 위원회 제4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전주) 방일수출촉진단 2회 63개사 93명 산업협력단 (투자유치단에서 명칭변경) 민관 30개사 57명 방일 산업기술교류협력 (산업기술 협력재단) 인재육성 305명, 생산성 협력 36개사 대학생 교류 : 한 40, 일28 상호방문 제8회 경제인교류촉진단 34명 방일
31회	서울 1999.04.08 ~ 04.10 한국 135명 일본 1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영향과 전망 한일 비즈니스 연대 (alliance) 제2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양국 건설협력 방향 일본기업은 한국의 투자환경을 어떻게 보나? 합동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투자환경 변화 APEC 투자박람회: 개최의 의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회 기계공업위원회 제25회 무역투자위원회 제17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제5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벵부) 방일수출촉진단 3회 96개사 135명 대학생 교류 : 한 40, 일21 상호방문 제9회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일24, 한34 방한 ('98,11)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 치 사 항
32회	도쿄 2000.06.01 ~ 06.03	한국 149명 일본 13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분과회 : 새로운 한일협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을 활용한 한일 기업간 협력 2. 한일 비즈니스 Alliance 전망과 과제 ◎ 제2분과회 : 한일공동과제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뉴라운드 시대의 한일협력 2.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정비 ◎ 합동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무역불균형의 근본원인과 대책 2. 서둘러야 할 한일 지역간 교류 3. 인교(隣交)의 촉진과 한일의 교류의 역할 4. 한일 해양교류의 현상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한일산업무역회의 ◎ 제10회 한일중견경제인교류 촉진단 ◎ 제18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6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광주) ◎ 방일수출촉진단 3회 65개사 99명 ◎ 대학생 교류 : 한 32, 일20 상호방문 ◎ 제1회 APEC 투자박람회 ◎ 부품·소재산업투자교류 미션단 방한
33회	광주 2001.04.12 ~ 04.14	한국 153명 일본 1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분과회 : 제조업에 있어서의 IT활용과 협력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리볼루션과 한국 IT 산업 2. 일본의 e비즈니스 현재와 미래 ◎ 제2분과회 : 구조조정속에서의 한일양국의 협력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 2.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계 대응 ◎ 합동분과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양국의 부품소재산업 협력 2. 환황해권지역간 국제물류 협력방안 3. 광주의 투자환경 4. 가깝고 친한관계에서 화끈한 관계로 5. 일본의 자본시장현황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한일산업무역회의 ◎ 제11회 한일중견경제인교류 촉진단 ◎ 제19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 제7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미야자키) ◎ 방일수출촉진단 2회 56개사 84명 ◎ 대학생 교류 : 한 32, 일21 상호방문 ◎ 제1회 한일 교류제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치사항
34회 히로시마 2002.04.11 ~ 04.13	한국 138명 일본 16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분과회 : 중국경제의 신장과 한일기업의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경제의 신장과 한일 산업계의 협력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에 대한 고찰 제2분과회 : FTA 추진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 FTA 쟁점과 추진방안 한일 FTA를 향한 일본 경제계의 대응 전체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본 한일간 지방교류 한류로 본 동아시아 상호 관계의 전망 히로시마의 경제개황 월드컵 이후의 한일협력의 가능성과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회 한일산업무역회의 (한 18명, 일 30명) 제12회 한일중견경제인교류 촉진단 제20회 중견·중소기업위원회 제8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창원) 방일수출촉진단 2회 58개사 83명 대학생 교류 : 한 30, 일21 상호방문
35회 대구 2003.04.24 ~ 04.26	한국 187명 일본 10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분과회 : 한일 양국 간 투자 교류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간 투자협력 현황과 방안 ICT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분야의 한일협력 제2분과회 : 한일 기업간 협력과 경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서비스업 분야 제조업 분야 전체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대일 협력을 위한 한국 중소기업 실태조사 한일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보완 가능성 조사 대구의 투자환경 한일 협력사업 성과 및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회 한일산업무역회의 (한 20명, 일 18명) 제13회 한일중견경제인교류 촉진단 제9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가고시마) 제2회 한일환경경제기술교류회의 (전주) 방일수출촉진단 2회 58개사 87명 대학생 교류 : 한 29, 일28 상호방문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치사항
36회	나고야 2004.04.22 ~ 04.24	한국 112명 일본 1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분과회 : 한일 산업공동화 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평가 2. 상공회의소에 있어 산업 공동화 대책 ◎ 제2분과회 : 한일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FTA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2. 한국 중소기업과의 교류 체험 ◎ 전체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관계의 전망 2. 혁신주도형 산업정책과 한일경제협력 3. 사랑, 지구 박람회 창조와 도전 : ACHI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한일산업무역회의 (한 20명, 일 40명) ◎ 제14회 한일중견경제인교류 촉진단 ◎ 한일중견·중소기업위원회 해산 ◎ 한일 중견경제인교류미션 해산 ◎ 제10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제주도) ◎ 제3회 환경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위해시) ◎ 방일수출촉진단 2회 54개사 91명 ◎ 대학생 교류: 한 30, 일18 상호방문 ◎ 한일 고교생 캠프 : 한 50명, 일 62명
37회	서울 2005.04.14 ~ 04.15	한국 145명 일본 1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분과회 : 제조업 협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철강협력 성공사례와 향후 협력 2. 소재산업의 한일 경제연대 사례와 향후 전망 ◎ 제2분과회 : 문화, 서비스 산업 협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 2. 한일해협 교류권의 현상과 향후 전망 ◎ 전체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떻게 한일간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 2. 한일관계의 현상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회 한일산업무역회의 ◎ 방일수출촉진단(27개사 40명) ◎ 제11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구마모토) ◎ 제4회 환경해경제기술교류회의 (미야자키) ◎ 중소기업상호보완사업 (한국79사, 일본60사) ◎ 대학생교류 : 한25, 일13 상호방문 ◎ 한일 고교생 캠프 : 한154명, 일130명

2. 한일산업무역회의

한일경제인회의의 4개 분야별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한일경제인 회의에 보고, 건의하여 양국 간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설치되었던 산하 4개 전문위원회(무역투자/기계공업/중견중소기업/장기구상연구 위원회)운영이, 1989년 장기구상연구위원회가 해산되고 한일 양국의 공동 경제문제에 대한 토의,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일반위원회가 신설(1990년)되어 한일산업기술협력의 방향/환경문제/투자환경요인으로서의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공동·개별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속에서 1998년에 한일경제인회의가 총괄하는 4개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재점검에 나서 그동안 독립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각 전문위원회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동년 7월에 일본측으로부터 신회의 설립안(가칭 산업무역회의)에 대한 제안서가 한국측에 전달되었고, 한일 양측 사무국(한국무역협회, 기계공업진흥회,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은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가진후 양측 회장의 문서교환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3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제안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기존의 무역투자/기계공업/산업일반위원회를 통합한 「한일산업무역회의」는 무역투자와 기계공업분야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관심분야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합의 형성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경제인회의에서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경영자에 의한 연구의 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산업무역회의의 구성은 강만수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과 아키야마 토미이치(秋山 富一) 스미토모상사 상담역이 양측 চে어맨으로 선임되었고, 김도형 산업연구원 경제자유센터 소장과 오지미 쇼



조(大慈彌 省三) 이시가와지마하리마중공업 부사장이 양측 코디네이터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일반위원들은 정·부위원으로 구분하고, 한국측에서는 기존 3개 전문위 소속 사 10개사 30명이 정위원으로, 기계공업진흥회 회원사 16개사가 부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일본측도 일한경제협회 회원사 24개사 48명의 정·부위원을 선출하였다.

논의의제는 주로 한일경제 현황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제가 중심이 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초 한일 양국 정부의 초미의 현안이었던 한일 FTA의 실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와 관련된 테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 통하여 한일FTA정부간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제언의 필요성을 상위 회의기구인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보고하고 또한 한일경제인회의의 테마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5-6〉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의제

횟수	일 시	장 소	참가자	주요 내용
1	1999.10.14~15	치바(카즈사아크)	강만수 체어맨, 김도형 코디대행 등 26명/秋山 富 一 체어맨, 大慈彌 省三 코디 등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경제현황의 인식과 의견교환 - 양국의 기업풍토와 상관습 (글로벌스탠다드의 시각) - 옵션 : 우미호타루 견학
2	2000.11.16~17	서울(무역센터)	강만수 체어맨, 이수철 코디 등 37명/秋山 富一 체어맨, 大慈彌省三 코디 등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경제현황과 과제 - 한일부품소재협력방안 - 한일FTA추진을 위한 지적, 물적 인프라 정비 - 옵션 : 김치박물관 견학
3	2001.11.15~17	후쿠오카(SRP)	조건호 체어맨, 이수철 코디 등 18명/秋山 富一 체어맨, 大慈彌省三 코디 등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 일본기업이 본 한국경제, 재일 한국기업이 본 일본경제 - 한일산업협력과 FTA/한일FTA경제적 효과 - 옵션 : 立命館아시아대학 시찰
4	2002.11.14~16	제주도(신라호텔)	조건호 체어맨, 이수철 코디 등 20명/秋山 富一 체어맨, 御坐 清美 코디 등 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경제현황의 인식과 의견교환 - 세계경제전망과 한일통상 이슈 - 통상정책을 둘러싼 세계적 흐름과 한일협력 전망 - 옵션 : 주상절리, 분재예술원 견학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횟수	일 시	장 소	참가자	주요 내용
5	2003.11.27~29	치바 (오쿠라 도쿄베이)	이석영 체어맨, 이수철 코디 등 17명/木村 伸 — 체어맨, 安武 史郎 코디 등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중소기업간 제휴 - 한일클러스터 계획사례 - 한국의 산업클러스터정책과 한일 산업협력방안
6	2004.11.18~19	경주(현대H)	이석영 체어맨, 이수철 코디 등 53명/麻生 泰 체어맨, 高梨 圭介 코디 등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FTA추진에 따른 분야별 협력 - 한일FTA추진방안과 기업의 대응과제 /파트너십 구축과 동아시아자유경제 권을 지향 - 옵션:자원메디컬 시찰
7	2005.11.21~23	교토(젠니쿠H)	이석영 체어맨, 이수철 코디 등 30명/麻生 泰 체어맨, 高梨 圭介 코디 등 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기업의 연휴현황 및 전망 - FTA시대의 과제/원산지 규칙과 기업 - 한일경제와 문화,인적교류 - 옵션: 금각사, 용안사, 니조성 견학
8	2006.11.06~07	서울 코엑스	유창무 체어맨 이수철 코디 등 36명/麻生 泰 체어맨, 清水 紘 一郎 코디 등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미래의 공동과제/저출산시대의 도래와 기업경영 - 한국의 투자환경과 한일합작사례 - 향후 산업무역회의 운영방안

주) 코디는 코디네이터임.

3. 지역간 경제협력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는 양국 간 정기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기술·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고자 설치하였다. 가장 먼저 출범한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1992년 국제전시회 ‘코리아 페스타’의 성공을 계기로 지역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기업이 단독으로 국가간 경제교류를 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당시 상공자원부와 큐슈경제산업국의 개최합의에 의하여 1993년 지자체의 투자환경 설명과 경제교류협력의 장으로 출발하였다. 한편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는 제2차 한일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99.12 산업장관회의)에서 지역간

경제교류확대방안으로 호쿠리쿠지역과의 경제교류회의 개최를 합의(당시 산업자원부와 추부경제산업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글로벌화와 지역주의의 동시 진행으로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한중일 3국간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협력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표5-7〉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운영추진 주체 및 대상지역

구분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국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 한일경제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 한일경제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 한일경제협회
	대상 지역	남부지역(부산, 광주,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동해지역(대구, 울산, 강원, 경북)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일본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슈경제산업국(국제사업과) - 큐슈한국경제교류회의 운영위원회(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부경제산업국(국제과) - 호쿠리쿠 한국경제교류회의 실행위원회(17명) - 호쿠리쿠경제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슈경제산업국(국제사업과) -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추진위원회(28명) - 큐슈경제연합회
	대상 지역	큐슈지역(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의 7개현 / 후쿠오카, 기타큐슈의 2정령시)	호쿠리쿠지역(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현)	큐슈지역(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의 7개현 / 후쿠오카, 기타큐슈의 2정령시)
중국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 - 과학기술부(과학기술 교류중심)
	대상 지역			중국환황해지역(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요녕성, 하북성, 산둥성, 강소성)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표5-8〉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주요 의제 및 프로그램

한일(큐슈)경제 교류회의 (1993~2010)	참석인원	한국측: 821명(정부:76명, 지자체:193명, 단체:382명, 기업:170명) 일본측: 1,018명(정부:103명, 지자체:213명, 단체:366명, 기업:336명)
	주요의제	(1) 한일(큐슈)중소기업간 경제교류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환경·IT·인재 등)협력의 촉진, (2)한일(큐슈)비즈니스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전개, (3) 한일(큐슈)지역간경제교류지원 등
	주요프로그램	(1) 한일경제포럼, (2)테마별 분과회/비즈니스 교류·상담회, (3)전시회 출전, (4) 산업시찰 등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2000~2010)	참석인원	한국측: 781명(정부:47명, 지자체:168명, 단체:259명, 기업:307명) 일본측: 1,135명(정부:167명, 지자체:240명, 단체:411명, 기업:317명)
	주요의제	(1) IT·기계분야의 교류촉진, (2)물류·관광분야의 협력촉진, (3) 비즈니스교류 촉진 등
	주요프로그램	(1)민간합동회의, (2)테마별 실무자회의(IT·기계·비즈니스·물류·관광), (3)전시회 출전/기업간 상담회, (4)산업시찰 등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2001~2010)	참석인원	한국측: 927명(정부:66명, 지자체:62명, 단체:651명, 기업:148명) 일본측: 1,495명(정부:171명, 지자체:255명, 단체:520명, 기업:549명) 중국측: 1,318명(정부:116명, 지자체:577명, 단체:354명, 기업:271명)
	주요의제	(1)환황해지역의 무역·투자촉진, (2)과학기술촉진, (3)교육·인재교류 촉진 등
	주요프로그램	(1)산학관 비즈니스 포럼, (2)전시상담, (3)대학 총장포럼, (4)물류포럼, (5)전체회의, (6)산업시찰 등

(1)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1993년 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한국과 큐슈 지역간의 산업협력을 위한 경제교류가 지속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큐슈 지역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산업구조도 변화함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망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큐슈 지역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이 대일 경제협력을 확대해가는데 있어서 지역적 교두보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분야 등 상호 보완적 산업기술 협력의 전망이 매우 밝은 곳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큐슈간의 경제협력 사업은 민간도 함께 참여하여 양국의 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행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단체 중심의 민간 라운드테이블을 설치, 운영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큐슈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검토 및 추진되어 왔다.



한일(큐슈)회의 참가대표단의 신행시찰

- *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한일공동협력
- * 신산업분야에 대한 한일협력(환경, 에너지, 바이오, 동영상 분야)
- * 정보제공센터 구축(수출, 수입 및 합작투자에 대한 신속한 자료제공 등)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표5-9〉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경과

회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6회	1999.05.31 ~ 06.02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라운드테이블 설치에 관하여 양측이 앞으로 적극 협력 (전국경제인연합회) •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및 중개알선의 일정한 룰에 기초한 실시 (산업기술평가원) • 제2회 환황해산업·기술페어의 전시회, 세미나 등 관련사업 참가 적극협력 (각 지방자치단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산업기술평가원) • 일본(큐슈)측의 제4회 업종별 미션의 방한 및 한국측의 對큐슈 업종별 미션 파견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한일경제협회,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 한국우량상품특판전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 '99 테크노마트 등 국내행사, 전시회 등에 일본 큐슈기업의 홍보 적극협력 • 중소기업 기술자연수 및 전문기술자 파견사업의 계속적인 실시협력 (중소기업진흥공단) • '99 APEC투자박람회 협력 (KOTRA) • 일본(큐슈)측의 일본(큐슈)·한국중소기업교류사업, 일본(큐슈)·한국해협경제권추진조사, 일본(큐슈)·한국지역간 (자매도시)경제교류사업의 실시협력 (각 지방자치단체, 한일경제협회)
제7회	2000.09.04 ~ 09.06	미야자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황해권 자치단체간 5개항 16개사업에 대해 합의 • 환황해권 물류확대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일 자치단체간 제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한 3국간 공동연구추진방안 논의 – 한국벤처기업의 일본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등 협력 – 중진공 한국벤처지원센터-일본 NBC간 업무협정 체결 • 양 지역간 Local to Local 산업기술협력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기업정보제공 알선 협력 – 인천-기타큐슈(환경), 광주-후쿠오카(광산업)간 협력, 지자체 또는 업종별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풀뿌리홍보회 등 투자 협력 • 제5차 한·일(큐슈)산업기술교류단 방한, 민간라운드테이블 설치, 사이버네트워크 구축 등

횟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8회	2001.06.11 ~ 06.13	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기술분야의 협력을 위한 5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16개 협력사항에 대하여 합의 • 양 지역의 벤처기업간의 비즈니스 매칭 확대(8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 - 「한·일 光Corridor」(500km)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측이 적극 협력 - 대한수입유망상품 조사단 파견 -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큐슈지역내 기업에 소개하여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수입유망상품조사단 파견 • 한국투자환경설명회 개최 ◆ 경상남도, 인천시, 광주시, 대구시, 충남 등 8개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 별로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본(큐슈)의 대한투자 유도
제9회	2002.08.28 ~ 08.31	카고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기술분야의 협력을 위한 5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5개항 12개 협력사항에 대하여 합의 • IT를 활용한 양국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사업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케이블네트워크(KJCN)의 활용을 위한 콘텐츠사업의 추진 - 중진공의 인터넷중소기업관과 기타큐슈시의 e-Techno Trade의 연계 - 한·일(큐슈) 지역간 화상상담시스템 탑재 사이트 구축 •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단 상호파견 및 전시회 상호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측 : 벤처기업수출상담회 개최, 대일기계류 및 부품 - 소재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한국기계전 및 - 국제정밀자동차기계전 등 개최 • 일본측 : 아시아 산업교류페어, 후쿠오카 벤처마트, 서일본종합기계전, 큐슈·국제테크노페어 IT 2002, 반도체국제워크샵 등 개최 • 중소기업기술자연수 및 전문기술자파견 사업 실시 • 중소기업기술자연수사업 및 전문기술자파견사업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인턴 연수사업의 실시 • 기업간 상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환경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투자환경을 일본 각 지역에 홍보하는[폴뿌리 강연회]의 개최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회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9회	2002.08.28 ~ 08.31	카고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지역간 경제교류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 부산광역시와 후쿠오카시간「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벨트」구축
제10회	2003.07.14 ~ 07.17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기술분야의 협력을 위한 5개 의제 18개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 • 한국·일본(큐슈) 반도체 구매상담회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과 기타큐슈시의 e-Techno Trade연계 • 한·일(큐슈) 지역간 畫像商談시스템 탑재 사이트 구축 • IT투자유치 로드쇼(IT관련상담회) • 「한국기계전」, 「2003 한국전자전」, 「K O V A - 큐슈NBC 정기교류회」, 「국제로봇페어」, 「클린·콜 큐슈·한국교류포럼」, 「아시아 디지털아트 대상」, 「아시아산업교류페어2003」 개최 및 참가 • 중소기업기술자연수사업 및 전문기술자파견사업 실시 • 이공계 인턴 연수사업의 확대 실시 • 부산광역시와 후쿠오카시간「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벨트」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사업의 구체화 • 인천광역시와 기타큐슈시간의 산업교류사업 실시
제11회	2004.07.13 ~ 07.16	쿠마모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기술분야의 협력을 위한 5개 의제 20개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양국 협력기반 구축 • IT전시·상담사이트 구축, 대학기업간 ON-LINE 기술협력 체제 구축, e테크노트레이드 협력 • 산업기술교류미션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일본국제컨벤션시(北九州), 국제광산업전시회(서울), 아시아 산업교류페어 2005 (北九州) 기술자 연수 - 일본 기술연수기관의 연수인원 확대, 중소기업근무 인력 연수사업확대 등 • 투자환경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투자환경설명회 지원(큐슈), 큐슈 IT투자환경설명회 협조(서울)공동 조사 • FTA의 영향과 한일해협경제권의 가능성 조사

횟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12회	2005.10.14	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기술 분야의 5개 의제 28개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 • 협력기반 구축 : 「북구주 e-Techno Trade」를 큐슈 전지역으로 확대(중진공/북구주시), 한·일(큐슈) IT비즈니스 포탈 사이트구축(한국테크노마트, 한국산업기술대/북구주시) • 밋션단 파견 : KOEX개최 국제전시회(한국무역협회), 대한민국 물산전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환황해 환경·리사이클 비즈니스 포럼 in 기타큐슈(큐슈경제산업국), 제8회 한·일(큐슈)산업기술교류 미션(큐슈기계공업진흥회), 아시아산업교류페어 2005(기타큐슈시), 후쿠오카 벤처 마켓(후쿠오카현) • 기술자 연수 : 이공계 산업기술CAMP 제후대학 알선(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중소기업기술자 전문프로그램 확대(중진공) • 조사·연구 : 對韓 투자진출 희망기업조사(KOTRA), 한·일(큐슈) IT분야 협력사업 발굴(전품연) • 지역산업 : 충북-큐슈바이오산업협력(충북도), 큐슈-서울IT비즈니스교류(북구주시), 충남-구마모토 전통산업협력(충남)

(2)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 일본 방문시 ‘한일 파트너십공동선언’, 1999년 3월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국 방문때에는 ‘한일경제협력아젠더 21’이 발표되었다. 또 2000년 9월에는 김대중 대통령 방문때 합의된 ‘한일IT이니셔티브’ 등의 기본 문서에 입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협력패턴의 다양화,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종래 국가차원 교류와 병행, 지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양국 산업장관회의인 제2회 한일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1999)에서 지방간 경제교류 확대 방안으로 호쿠리쿠(北陸) 지역과 ‘경제교류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국가차원의 교류와 병행하여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등 4개 자치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2000년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협력, 조사연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동해권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상호 미션교환, 기술인력 교류, 산업 기술집적지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경제교류회의와는 별도로 민간경제교류회의 및 양국 기업간 상담회를 통해 무역, 투자, 기술협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회의 개최 경과 및 주요 성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한일호쿠리쿠회의 양국 단장의 공동성명 조인식

〈표5-10〉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경과

횟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1회	2000.07.05 ~ 07.07	토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의 3가지 의제에 대한 양 지역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교환하고, 환동해권 8개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간 3개 의제 11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도출 • 기업간 교류촉진: 산업기술미션 파견(2000.10월), 산업미션방한(2001.2월) 섬유분야 미션교환, 전자부문 협력수요조사 및 상호교환 • 자치단체간 교류촉진: 물류, 관광등 다양한 분야에서의의견교환 실시 •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 한국 투자환경의 홍보를 위해 ‘폴뿌리 강연회’ 개최 • 동해권 신항만 건설사업에 일본 민간자본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제2회 한국테크노마트, 한일벤처기업마트에 대한 홍보 협조 •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연수 등 기술인력교류사업에 대한 홍보 협조 • 양 지역 산업기술집적지간 협력 추진
제2회	2001.02.19 ~ 02.23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구축, 산업기술교류 및 공동조사연구 등 3개 분야의 13개 사항에 대하여 합의 • 대구시와 후쿠이현과의 섬유 및 광학분야 등 양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교류미션을 파견 • 산업기술집적지간 협력의 강화(대구테크노파크와 토야마테크노폴리스간 협력협정체결 추진) • 기술인력교류 확대(비즈니스인턴십 신설 등) •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국제물류”에 대한 양국 연구결과 발표: 양지역간 물동량 증가 및 항만시설 확충수요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일본 호쿠리쿠지역의 선적화물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해 입항로 인하,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
제3회	2002.04.24	가나자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환동해권 8개 자치단체간 3개 의제 11개 분야 합의 • 파트너십 구축 : 양국 기업간 교류·상담회 개최, 동북아 비즈니스촉진회의(02.5월 경북)등 지자체 주관의 국제행사에 상호 참가 지원 및 홍보 등 • 산업·기술협력 : 「대구지역 IT기업 산업협력단」의 일본 파견,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회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3회	2002.04.24	가나자와	<p>산업전시회 상호 참가 지원, 한국이공계 인턴 대일 연수사업, 한·일 벤처기업 종사자간 상호기업연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 : 무역·투자·기술 양국기업 협력 수요조사 실시 등
제4회	2003.05.28 ~ 05.30	대구	<p>◆ 파트너십 구축, 기술협력 확대, 공동조사연구 등 3개 의제 15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각 협력사업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회 동북아비즈니스촉진 회의, 2003년 경주세계문화Expo, 북동아시아 경제교류회의 등에 상호 참가 양양 국제공항과 토야마공항간 정기항로 개설 추진 동해항과 쓰루가항(후쿠이현)간의 화물선 취항 협력, 쓰루가항 홍보 한국이공계 대학생 일본기업 현지 연수확대 제3회 한국벤처산업전을 통한 기술협력 양국의「IT산업협력단」의 상호 파견 한국기계전을 통한 기계산업분야 기술교류 토야마 테크노페어를 통한 기술교류 한·일(호쿠리쿠) 산업집적지 간의 협력 촉진 방안 공동연구 등 한일 기업간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 정밀기계 및 IT업종 43개 기업 상담 : 56건 40억5천만원(성약가능 : 7건 13억7천만원) 기술이전 및 기술제휴 : 10 건
제5회	2004.05.26 ~ 05.29	토야마	<p>◆ 파트너십 구축, 기술협력 확대, 공동조사연구 등 3개 의제 26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각 협력사업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회 세계 Solar City 총회(대구), 제4회 대구국제광학전(대구), 2004 국제 자동화정밀기기전(기계진흥회) 등 지자체 및 경제단체 주관의 국제행사에 상호 참가 및 지원 산업·기술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지역 IT기업 산업협력단」의 일본 파견, 산업전시회 상호 참가 지원, 한국이공계 인턴 대일 연수사업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지역간 기업의 비즈니스 수요조사 실시 등 한·일 기업간 1:1 상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22개사와 일본 35개사가 참여하여 92건 392만불 규모 상담 참여 자치단체의 투자환경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쿠리쿠지역 50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

횟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6회	2005.07.19 ~ 07.22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구축, 기술협력 확대, 공동조사연구 등 3개 의제 23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각 협력사업을 실시 •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동북아자치단체연합(6개국 40개 회원단체)이 경제·산업·문화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동북아경제통상 네트워크」구축 - 「2006 대구투어엑스포」에 일측 관계기관 참여 및 홍보 - 양양국제공항과 코마츠 및 토야마공항 정기항로 개설에 협력 • 산업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쿠리쿠기술교류테크노페어 2005(10월)」와 「북동아경제 교류 EXPO2006 (9월)」에 한국관련 기관 참여 - 「한국이공계 인턴 연수사업」에 일본측의 연수기업 확대 - (재)포항테크노파크와 이시카와현 사이언스파크내 기업간 기술협력검토 •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호쿠리쿠) 산업집적지 간의 협력사업발굴」공동조사 검토

(3) 환황해경제 · 기술교류회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환황해(環黃海) 지역의 무역, 투자, 기술 등 각 분야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환황해경제 · 기술교류회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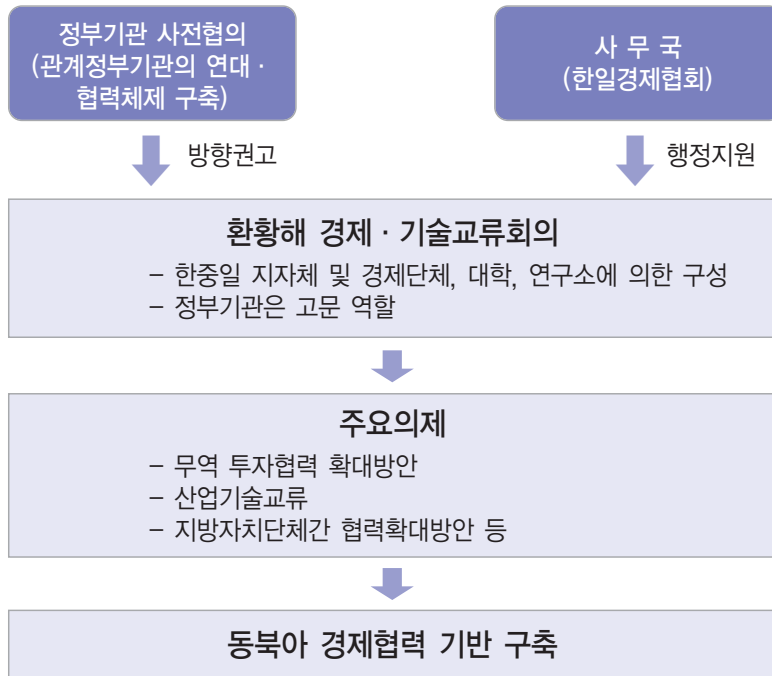


한중일 환황해비즈니스포럼

실무적으로는 제7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2000년)에서 환황해 회의 개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00년 11월 제3회 한일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에서 지역간 교류협력 촉진의 일환으로 ‘환황해경제 · 기술교류회의’의 조기개최에 합의하고 제1회 회의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도표5-3〉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구성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인재교류(간사국 : 한국), 무역·투자 교류(간사국 : 중국), 기술교류(간사국 : 일본 큐슈) 등 3개 분야별 실질적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가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3국의 지역간 경제·기술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최초의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그동안 한중일 삼국은 양자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왔지만 삼국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협력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게 됨으로써 공동의 이익과 협력을 위한 체계가 시작된 것이다. 인턴십 사업, 무역 및 투자 순회 설명회, 지능형 로봇공동연구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간 협력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11〉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횟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1회	2001.03.15 ~ 03.17	후쿠오카	<p><각국 정부기관의 주요 제안사항></p> <p>◆한국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 사절단 상호파견 확대 및 투자 박람회 개최 • 환황해지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의회 구성 운영 - 환황해지역내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 전자상거래 정보 토털 사이트 구축 • IT, 바이오, 환경 등의 신산업분야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3국 간 컨소시엄 구성 • 한·중·일 산업기술페어의 3국 순회 개최 및 기술거래를 위한 e-Market place 구축 <p>◆중국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와 기업 중심의 실무협력을 전개하고, 환경보전, 농업 IT 및 하이테크 등의 중점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 실시 • 연구·시찰·연수 등의 인재 정보교류의 추진 • 하이테크와 그 관련 산업, 기술형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 검토 • 환황해 지역내의 중점 협력 분야 도출하여 연구 강화 <p>◆일본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시간의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상호 인정하는 우대조치의 방향 검토 • IT, 바이오, 환경, 리사이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환황해 컨소시엄」사업 등의 구체화 • 큐슈 소재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황해 인턴십」사업 등 인재교류 추진 •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 플랜」 및 「환황해 산업·기술 교류 플라자」의 개최
제2회	2002.10.23 ~ 10.25	전주	<p>◆인재교류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IT, 일본의 ET·신소재분야, 중국의 물류·비즈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재교류사업 실시에 합의 • 이공계 대학생 상호파견 프로그램 실시 • 「한·일 IT 연수사업」확대 실시 및 「한·중 이공계 기술연수 사업」신설 • 「한·중·일 경영자 CEO 심포지엄」순회개최 검토 <p>– 무역·투자 촉진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 지역간 무역·투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회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2회	2002.10.23 ~ 10.25	전주	<p>설명회, 부품전시회 개최 등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ETRO 주최로 중국에서 열리는 부품전시회에 한국측 참가 • 한국 자유무역지대, 중국 개발구, 일본 수입촉진지역간 교류 실시 • IT사절단 상호파견 및 웹사이트 연계를 통한 전자상거래 촉진 검토 - 기술교류 분야 • 신산업 창출 및 기술개발연구 촉진을 위하여 3국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 3국의 국제공동연구제도 정비 및 창구기관 설치 • 지능형 로봇개발 등 구체적 테마를 선정하여 공동연구 실시 • 「환황해 산학제휴 심포지엄」개최(2003년, 일본 큐슈)
제3회	2003.09.23 ~ 09.26	웨이하이	<p>◆ 인재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기술 연수생을 상호 수용(한국은 IT 분야, 일본은 ET분야, 중국은 물류 및 Marketing 분야), 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어학교육 Program 운영, 환황해 이공계 대학생 해외 현장 실습 사업, 자국 유학생 산업체 Internship 사업 실시 - 기술교류 분야 : 「환황해 공동연구 창구기관 연락협의회」 설치·운영, 하이테크 공업단지간 교류 등 • 중국 서부 대개발추진 연구 사업에 한·일 양국 참여 - 무역·투자촉진 분야 • 환황해지역 무역증진을 위한 부품구매전 개최, 물류 분야 단체·기업으로 구성된 투자시찰단 파견
제4회	2004.10.24 ~ 10.27	미야자키	<p>◆ 무역·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촉진단 상호 파견, 아시아산업교류페어 2005 협력(일본 큐슈) 등 - 인재교류 • 환황해지역 대학총장회의 개최, 이공계인턴십사업 확대, 컴퓨터·소프트웨어 전문가교류확대 등 - 기술교류 • 하이테크 포럼(도쿄), 환경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국제 산학연 공동개발(에너지절약, 연료 등) 추진 검토 등 - 기타 • 환황해 웹사이트 구축, 행정백서 발간, 지역연구소 설립 등

횟 수	일 시	장 소	주 요 실 적
제5회	2005.11.28 ~ 12.01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 : 제6회 한국국제기계박람회(기진회), 아시아산업 교류페어 2006(키타큐슈시) 참가 협력 등 ◆ 인재교류 : 자연에너지변환 기술연구자 양성프로그램(일본, 문부성)참여, 이공계 인턴십 사업 확대 등 ◆ 기술교류 : 환경·리사이클기술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 국제 산학연 공동개발, 대덕R&D특구와 연구소·기업간 교류협력 등

4. 인적교류 : 고교생캠프

한일경제협회는 1985년 한일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교류사업’ 을 2004년까지 20년간 개최하였다. 20년간 양국 대학생 교류인원은 1,249명으로 한국 대학생 803명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일본 대학생 446 명이 방한하였다. 이러한 대학생 교류사업을 통해 양국 대학생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미래 한일 관계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공헌하였다.



한일 고교생 교류 사업발표회

〈표5-12〉 한일청소년교류사업 목적 및 경위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 청소년 대학생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친선도모 및 우호증진 • 한일 양국 간의 폭넓은 인적, 문화적 교류확대 • 상대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근거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 • 한일 양국 간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경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1985년 4월 경주)에서 양국 간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2002년 월드컵 경기 한일공동개최를 계기로 대학생 교류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고교생 교류사업을 시작하였다. 양국 고교생 간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공동캠프를 통해 서로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하고 미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4박 5일 동안 합숙하면서 양국의 관광·문화에 대한 비즈니스를 한일 혼성의 팀별로 기획하고 발표하는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 고교생 교류사업의 목적

양국 고교생 교류사업은 차세대를 짚어질 젊은 세대의 인적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또 관광과 문화를 비즈니스화한 창의적인 공동작업을 통해 양국 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양국 고교생들이 미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한일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오픈니언 리더로서의 성장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한일 고교생 교류 오리엔테이션

(2) 교류사업의 특징

이를 위해 이 사업에서는 약 100명의 양국 고교생을 10명 안팎의 한일 혼성팀으로 나누어 독자적인 사업기획을 입안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팀에는 멘토를 한명씩 배정하여 각 팀이 시장조사를 거쳐 독자적인 사업기획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한다. 4박5일간의 합숙기간 동안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고교생은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오리엔테이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교류사업 주요 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친해지기 프로그램
- 사업아이템 구상 및 시장조사, 아이템 결정, 팀 구성원의 단결력과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홍보물제작 및 사업전략 세우기
- 팀별 사업발표회 및 시상·수료식
- 문화·경제·일반상식에 관련된 퀴즈를 풀어 나가는 도전!골든벨
- 팀원들에게 우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친구에게 한마디
- 양국 전통놀이 한마당
- 장기자랑과 전통의상 패션쇼가 어우러진 캠프파티
- 문화체험(개최국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 방문)
- 사업 아이템 카테고리: 관광·레저/패션·의류/유통·서비스판매/정보제공 서비스 복지·의료/음식서비스·식료품/환경/교육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4) 개최경과

〈표5-13〉고교생교류 캠프 개최 경과

	기 간	지 역	한 국 측	일 본 측	합 계
제1회	2004. 1.16~1.22	도쿄 (아사히맥주본사)	6개교 50명	4개교 62명	10개교 112명
제2회	2004. 7.26~7.30	도쿄 (요미우리랜드)	31개교 52명	10개교 20명	41개교 72명
제3회	2004. 8.18~8.22	서울 (올림픽파크)	13개교 48명	7개교 46명	20개교 94명
제4회	2005. 2.11~2.15	도쿄 (하네다연수센터)	27개교 54명	19개교 64명	46개교 118명
제5회	2005. 8. 6~8.10	도쿄 (하네다연수센터)	20개교 46명	17개교 44명	37개교 90명
제6회	2006. 2. 9~2.13	도쿄 (하네다연수센터)	23개교 47명	17개교 59명	40개교 106명
제7회	2006. 8. 4~8. 8	서울 (라마다서울호텔)	13개교 49명	16개교 38명	29개교 87명
제8회	2007. 2. 9~2.13	치바 마쿠하리 (국제능력개발지원센터)	22개교 38명	17개교 42명	39개교 80명
제9회	2007. 8. 5~8. 9	도쿄 (하네다연수센터)	20개교 41명	20개교 34명	40개교 75명
제10회	2008. 2.10~2.14	일산 (동양인재개발원)	20개교 39명	17개교 46명	37개교 85명
제11회	2008. 8. 3~8. 7	도쿄 (하네다연수센터)	27개교 44명	25개교 44명	52개교 88명
제12회	2009. 2. 1~2. 5	서울 (렉싱턴 호텔)	23개교 50명	34개교 50명	57개교 100명
제13회	2009. 7.28~8. 1	용인 (금호아시아나인재개발원)	25개교 44명	31개교 44명	56개교 88명
제14회	2010. 2. 2~2. 5	오사카 (코스모스퀘어 국제교류센터)	41개교 49명	24개교 39명	65개교 88명
제15회	2010. 8. 3~8. 7	서울 (라마다서울호텔)	34개교 49명	40개교 50명	74개교 99명
제16회	2011. 2. 8~2.12	서울 (렉싱턴 호텔)	38개교 50명	39개교 50명	77개교 100명
합계			383개교 750명	337개교 732명	720개교 1,482명

(5) 한일고교생교류캠프의 기대효과

한일 고교생 캠프는 양국 청소년이 한일 문화를 학습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직업윤리 향상과 자생력 및 책임감을 학습하도록 하며,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전략의 구상이라는 통합적인 과제 해결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V_소결: 한일 경쟁구조에서의 협력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는 한일경제관계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다.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한일협력의 역사에서 경쟁의 구조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일 양국 모두 지역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지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계 안보질서의 변화 가운데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모색하면서 동아시아 각국과의 정치적 긴장을 증가시켰다. 1998년 이후 한일 문화교류 확대와 한일 월드컵의 공동개최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지만 역사, 영토 문제 등으로 2000년대 중반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한일 양국의 경제적 경쟁도 치열해졌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대외진출이 확대되면서 일본에 대한 교역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의 한일 기업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한편 교역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부품소재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경제협력 : 1998~2005

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에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가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그러나 대일 무역불균형 구조는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양국 경제관계의 변화 가운데 한일경제협회의 기능과 역할도 변했다. 정부간 협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져왔던 한일경제협회의 사업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교류로 전환되었다. 산하 4개 위원회는 한일산업무역회의로 통합되었고 기술협력 및 이전 관련 사업은 1992년 설립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회의 의제도 한일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채택되었다. 부품소재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이 추진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일경제인회의의 기능적 성격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한일경제협력이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일경제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6장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2000년대 후반 한일 양국 경제는 중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역사갈등에서 비롯된 양국관계의 긴장은 급격히 해소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양국 경제의 전략과 구조를 전환시켰다. 수출주도 산업화를 지속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및 기업,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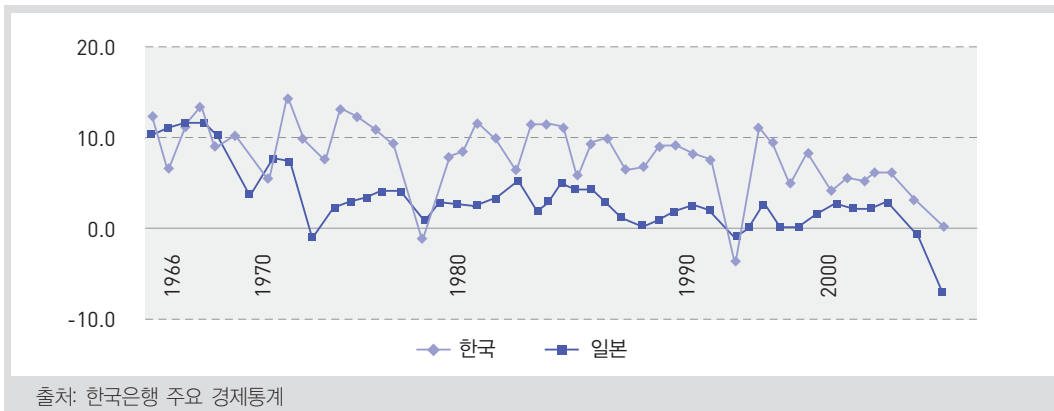
새로운 국가전략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시아의 부상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한일 양국 모두에게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면서 아시아를 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모색되고 추진되고 있다. 또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쌍무적 FTA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산업의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 구조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전략은 부품소재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구조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한일 경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한일경제협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변화하는 양국 경제관계 가운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경제관계의 다변화다. 변화하는 지역 및 세계질서 가운데 한일 경제협력은 더 이상 양자적 차원이 아니라 다자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일본과의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수평적이고 협력적 분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 한일 경제협력이 자본, 기술, 인력 교류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다차원적 협력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I_경제위기 이후의 한일 경제

2005년 이후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슈는 경제위기 가운데 한일협력관계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2008년 미국 발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신용위기는 전세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쳤다. 선진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역, 금융, 투자 등에 있어서 선진국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 위기를 막기 위해 G20을 중심으로 신용공급, 정책공조 및 보호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파산과 실업률 증가, 수출 및 투자의 침체에 따른 성장 정체 등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과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다.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가 이루어졌고, 국내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수출부문의 정치적 중요성은 더욱 증가했다. 국내 소비가 침체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수출을 통해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던 미국조차 2010년 ‘국가수출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하고 5년 이내에 미국의 수출을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동아시아 역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수출주도 산업화로 인해 대외수출에 의존도가 높았던 동아시아의 경우 선진국 시장의 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년 여의 경기부양 조치가 추진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성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경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도 경제위기의 여파가 컸다. 2008년 하반기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일본경제는 2008년 4/4분기 -4.3% 성장을 하였고 2009년 1분기에는 -8.7%, 2분기에는 -7.2%까지 하락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장기침체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일본경제는 다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일본경제가 세계경제 위기에 더 민감했던 것은 고기술 제품의 선진국 시장에 의존한 수출구조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2008년 4분기 -3.4%를 기록하고 2009년 1분기에 -4.2%를 최저점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무역수지 흑자도 대폭 증가하였다. 기업의 성과도 급격히 개선되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9년 영업이익이 일본 8개 전자회사의 영업이익

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기업 배우기라는 역(易)학습 논의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수출구조와 국가전략의 요인 때문이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8%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는데 바로 중국효과가 한국경제의 차별적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 시장개입과 전략 역시 한국경제의 신속한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더욱 촉진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금융통합을 위해 제안되었던 치앙마이 구상(CMI)은 2009년 역내 금융협력 기구로 제도화되었다. 수출시장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쌍무적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양한 지역 공동체 구상이 제안되는 가운데 전통적 지역협력 구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3(APT : ASEAN+3) 외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지역포럼(ARF)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역내 일중 간의 전통적 갈등구조와 패권경쟁,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 그리고 역사인식과 역내 경제적 불균형(regional imbalance) 등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한일 경제협력은 양자적 관계에서 동아시아 지역 및 글로벌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이 촉진되는 가운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단절되었던 양국관계를 복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2008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공식실무 방문하여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외교가 재개됨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었다.

II_동아시아 지역통합과 대외 경제정책

1.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아시아 시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냉전기에 형성된 미국의 양자주의 동맹구조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위협받게 되었다. 중국은 외환위기 전후 아시아, 특히 ASEAN에 대한 외교적 포용(engagement)을 확대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일본 역시 새로운 지역질서를 주도하려고 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발표하며 지역통합 논의에 참여하였지만 지역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APT, APEC, EAS, ARF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역내 비중을 늘려왔다.

이명박 정부는 ASEAN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3월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3국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한국의 대 아시아 외교 지평을 전 아시아 지역과 남태평양 지역으로 넓히고, 동시에 경제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안보, 문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한-ASEAN 특별 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개최하며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또 중앙아시아 3국을 연속 방문하면서 대 아시아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쌍무적 FTA 역시 적극 추진되고 있다. FTA가 통상정책의 핵심의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 역시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이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 및 투자 유입 확대 등 FTA를 활용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화, 구조 조정의 가속화, 새로운 동맹 관계의 확보 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FTA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직후 신설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된 통상 교섭 본부는 FTA 추진을 핵심 통상 정책 분야로 선정하였고, 한국의 첫 FTA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이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국가들과 FTA 협정을 발효시켰다. 그리고 이미 미국, EU, 인도와의 FTA 협정을 타결짓고 의회 비준까지 끝내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터키, 페루, 러시아 등의 국가와 FTA 협상을 계획하거나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일본과의 FTA 협상은 2002년 7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되었지만 2004년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9년 다시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표6-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010년 10월 현재)

단계	국가	수출비중(%)	수입비중(%)	발효
발효	칠레	0.7	0.9	2004년 04월
	싱가포르	3.9	1.9	2006년 03월
	EFTA	0.6	1.0	2006년 09월
	ASEAN	8.3	9.4	2009년 09월
타결	미국	11.0	8.8	2007년 06월
	EU	2.1	1.5	2009년 07월
	인도	13.8	9.2	2009년 08월
협상	일본	6.7	14.0	2010년 협상 재개시
	캐나다	1.0	1.0	2005년 01월 협상개시
	멕시코	2.2	0.2	2007년 12월 협상개시
	GCC	3.6	19.6	2008년 07월 협상개시
	호주	1.2	4.1	2009년 05월 협상개시
	뉴질랜드	0.2	0.3	2009년 06월 협상개시
	페루	0.2	0.2	2009년 01월 협상개시
연구	중국	21.7	17.7	
	MERCUSUR	1.6	1.2	
	터키	0.9	0.1	
	러시아	2.3	1.9	-
	콜롬비아	0.3	0.0	
	이스라엘	0.2	0.2	
	SACU	0.4	0.5	
합 계		78.9	92.0	

출처: 외교통상부(www.fta.or.kr) 및 통계청, 수출입 비율은 2008년 기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양자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합적 이유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는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안보적 이유가 작용한 결과다. 반면 대부분의 FTA는 수출주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대외 수출 시장개척의 의미가 많다.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농산물 등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통합이 지체되는 가운데 양자적 FTA의 확산은 궁극적으로는 대외 시장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경쟁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2005년 독도문제와 역사 갈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냉각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2008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북한 문제와 환경, 무역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양국 협력이 포함되었다.

우선 양국 정상은 그간 단절되었던 정상외교를 활성화하고 양국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류협력에 있어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일 간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VISA Program)의 정원을 늘려 2009년에는 현재 2008년의 2배인 7,200명으로, 그리고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일 대학생교류 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3년간 1,500명의 양국 대학생 상호유학 지원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유학생은 부품 및 소재산업 등과 관련된 학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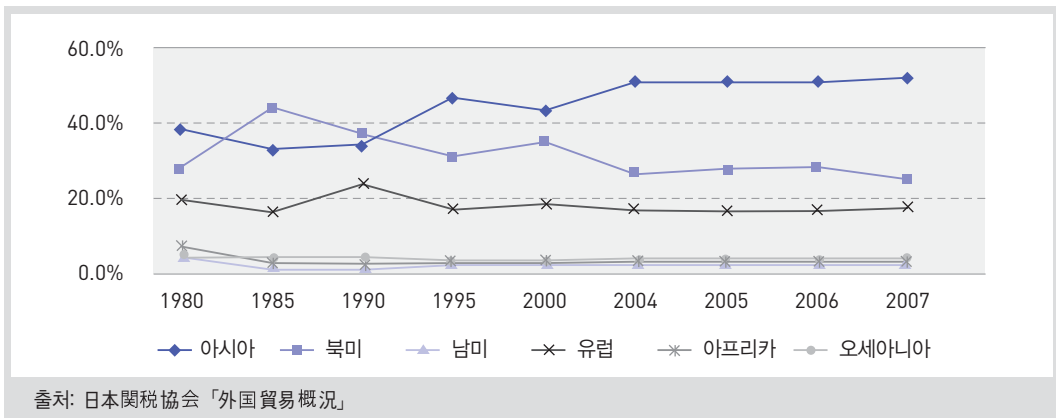
경제분야의 협력에도 역점을 두었다. 양국 간 FTA/EP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부품·소재 산업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양국 관계 기관간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전시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실시하는 한일 비즈니스 교류 촉진사업 및 지역간 교류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데 기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문제나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북일관계,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위한 6자 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를 위한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유엔개혁 등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 협력함으로써 성숙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일본 역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2004년 5월에는 일본은 범국가적 단체인 동아시아 공동체평의회(CEAC)를 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현상, 배경과 일본의 국가전략이라는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여 2005년 8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도표6-2〉 일본의 지역별 수출액 비중 1980~2007



2005년 12월에는 일본의 주도하에 제9차 APT 정상회의에 이어 제1차 EAS가 개최되었다.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미국, 일본,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의 전략적 대립이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아시아를

위한 지역통합을 주장한 바 있었다. 일본과 미국은 이에 반대하며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역내 국가들은 물론 미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의 인접국가를 포함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반면 중국은 EAS가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양국의 포위전략으로 간주하고 말레이시아와 함께 미국을 배제한 APT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EAS는 APT와 미국 등의 주변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지만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의 이해관계가 지역협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시아 무역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일본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시장이나 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시장의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의 경우 1995년에는 일본 전체수출에서 5.0%를 차지하였지만 2007년에는 15.3%까지 증가하였고 그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쌍무적 FTA 역시 적극 추진하고 있다. FTA가 중요한 통상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통산성이 1999년 통상백서에 FTA 문제를 기술하면서부터다. 2002년에는 외무성 경제국에서도 『일본의 FTA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발전, 시장확대 및 지역협력이라는 중요 목표에서 추진된 일본의 FTA 전략은 2002년 1월 14일 싱가포르와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계협정’(JSEPA, The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는 물론 스위스, 인도 등과 FTA 협상을 타결했다. 호주, 한국,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의 FTA 협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표6-2〉 일본의 EPA 추진 현황 (2010년 10월 현재)

단계	국가	교역비중(%)	투자비중(%)	발효
발효	싱가포르	2.2	—	2002년 11월
	멕시코	1.0	0.4	2005년 04월
	말레이시아	2.4	—	2006년 07월
	칠레	0.7	0.1	2007년 09월
	태국	3.3	—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	2.7	—	2008년 07월
	브루나이	0.2	—	2008년 07월
	필리핀	1.4	—	2008년 12월
	ASEAN	13.0	11.1	2009년 02월(최종발효)
	베트남	0.9	0.1	2009년 10월
	스위스	0.6	0.2	2009년 09월
타결	인도	0.8	0.5	2010년10월 타결 2011년01년 발효
협상	호주	3.4	2.7	2007년 04월 협상개시
	한국	6.1	2.4	2010년 협상 재개
	페루	—	—	2009년 05월 협상 개시
	GCC	9.0	0.7	2006년 09월 협상개시
합 계		34.6	14.7	

출처: 일본 외무성, 교역 및 투자비중은 2007년 기준

한국과 비교하면 발효된 FTA 조약이나 협상이 진행중인 조약의 숫자는 일본이 많으나 이들 국가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유럽 등 핵심적 교역 대상국과 FTA를 완결 지었으며 중국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사실상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셈이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셈이다.

지역통합과 쌍무적 FTA의 추진은 한일 경제협력에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양자적 경제관계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측면, 그리고 미국, 유럽이라는 세계적 측면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 받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이 부품, 기술, 소재 등에 있어서 일본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의존적 수출

구조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중요한 한 축이다. 또, 한국의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은 중간재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한국 의존적 수출주도 성장구조는 다시 글로벌 불균형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구조, 산업전략, 수출전략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구조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한일 경제협력의 의제와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Ⅲ_글로벌 경제위기와 한일경제

1.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일 양국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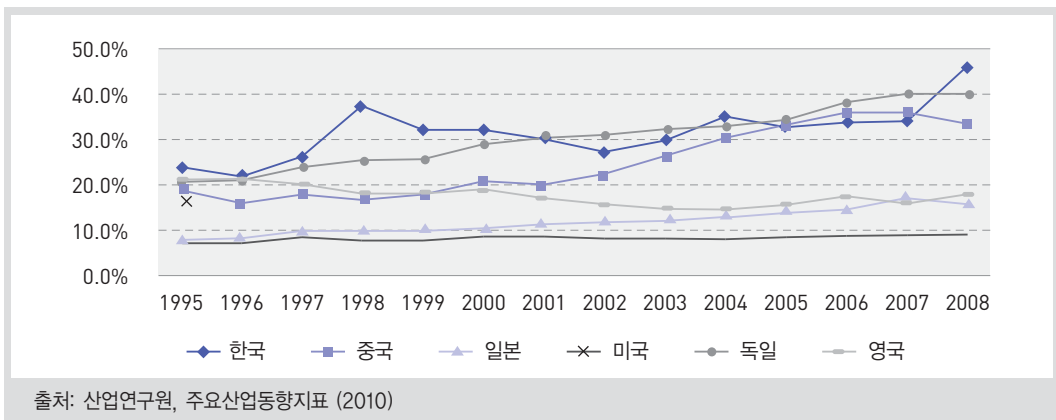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신용시장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2001년 9·11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유동성의 과잉이 초래되었다. 과잉 유동성은 주택시장과 파생 금융시장에 거품을 만들었고 2007년 주택가격의 하락과 서브 프라임 주택대출 시장이 부실화되면서 파생상품의 연쇄위기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파생상품에 대한 방만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소위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규제완화와 급성장하는 금융시장에 비해 금융감독 기능이 미비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융, 무역, 통화 등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신용위기는 전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쳤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과 일본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해온 한국에게 그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도 2000년대 이후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1995년 8%에서 2008년 16%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해왔다. <도표6-3>은 한국, 일본과 세계 각국의 수출의존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이후 한국, 일본,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계속 증가해왔다. 한국의 경우 1995년 25%에서 2008년에는 46%까지 증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가하였다. 중국도 20%에서 30%까지 증가하였는데 중국의 경제성장이 수출주도 산업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훨씬 높은 한국의 경우 해외 시장이 소비부진으로 침체할 경우 동반 침체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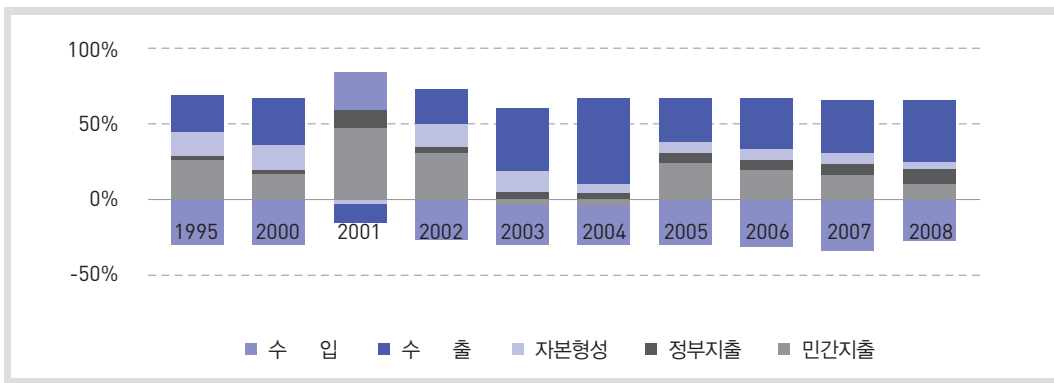
〈도표6-3〉 각국의 수출의존도 변화



수출의존도 증가는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변화시켰다. 한국의 경우 수출주도 산업화의 산업구조로 인해 수출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경제위기로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수출부문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도표6-4〉는 1995년에서 2008년까지 부분별 성장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전체 경제성장에서 민간지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등이 경제성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축소되고 정부 재정지출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수출부문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 2001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수출 부문에 집중된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양

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한국 수출의 80% 이상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의 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도표6-4〉 한국의 부문별 성장 기여율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민간지출	62.1	53.6	79.3	70.3	-8.5	4.1	62.4	49.1	53.1	22.2
정부지출	7.2	2.4	17.5	9.7	21.7	11.5	15.1	17.6	14.8	26.7
자본형성	42.1	38.3	-3.3	31.5	43.3	17.5	17.4	25.3	20.5	10.5
수 출	56.2	83.8	-26.4	48.1	153.6	141.4	74.4	86.2	102.6	114.8
수 입	-73.1	-80.4	38.4	-57.8	-121	-84.1	-67.8	-79.7	-88.5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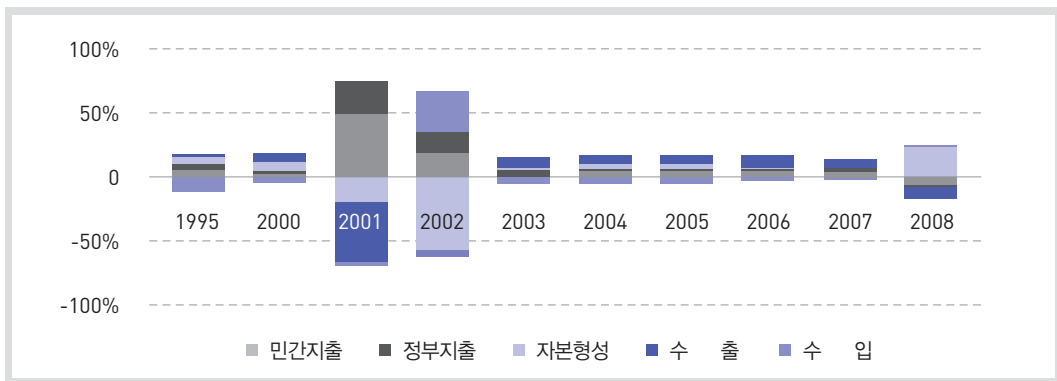
출처: 산업연구원(2010), 『주요산업동향지표』

반면 일본의 경우 수출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정책을 지속해왔고 재원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전체 재정투자의 약 50%에 달하는 부채가 누적되면서 2008년 기준 일본의 재정부채 규모는 GDP 대비 170%에 달해 117%인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표6-5〉에서 보듯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경제성장에서 정부지출의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지만 고이즈미 내각 이후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수출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민간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었다. 민간지출, 정부지출, 그리고 기업의 시설투자 부분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2009년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더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도표6-5〉 일본의 부문별 성장 기여율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민간지출	55	14.9	498	238.5	16.6	33.5	38.8	41.8	15.5	-43.9
정부지출	30.4	25.3	274.9	158.4	29.4	12.1	14.3	3.3	14.5	-20.2
자본형성	43.4	42.6	-227.5	-571	7.3	24.1	32.7	12.8	21.2	182.2
수 출	19	44.5	-412.9	292.4	71.3	59.8	47	65	51.9	-39.7
수 입	-51	-28.9	-32.3	-33.6	-26.5	-29.2	-31.2	-22.3	-7	14.3

출처: 산업연구원(2010), 『주요산업동향지표』

2. 한국의 성과와 일본의 실패

2000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성과는 엇갈리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만 보아도 한국은 일본 보다 높은 수준의 GDP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는 더욱 높아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및 조선업계의 선전은 도요다의 위기나 일본 전자업계의 침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정부부채의 증가, 고령화

와 출산을 저하라는 문제와 연관되면서 일본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여전히 한국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 자본, 금융에 있어서 일본 경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후 한일 간의 경제적인 성과의 차이는 한일 경제협력에 새로운 측면이라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우선 기업의 성과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설비투자 전략이다. GDP 대비 설비투자액은 일본보다 한국이 뒤진다. 2000년대 한국은 GDP 대비 평균 9~9.5%의 설비투자율을 유지해왔다. 반면 일본은 2004년 이후 10% 이상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수출부문에 집중된 설비투자가 2008년 이후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표6-3>은 1995년 이후 한국의 산업별 설비투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6-3> 한국의 산업별 설비투자 비중 추이(%)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제조업 전체	69.3	52.3	52.6	54.7	60.9	61.7	59.2	58.4	56.6	58.7
1 반도체	n.a.	41.6	33.5	30.4	38.5	45.6	41.2	36.2	34.5	33.0
2 철 강	13.0	5.1	9.5	9.7	6.1	7.1	10.2	11.0	9.3	12.1
3 자동차	8.7	11.5	13.6	11.5	14.6	11.2	13.7	12.3	10.3	8.3
4 석유화학	5.6	3.3	4.8	7.5	5.5	4.3	5.2	6.2	7.9	8.2
5 조선	4.1	1.5	3.4	3.1	2.8	2.4	2.7	3.4	5.4	7.6
6 일반기계	2.9	1.5	2.2	2.3	1.8	1.5	1.5	2.4	2.9	4.0
7 정밀화학	2.3	4.1	3.5	4.3	3.0	2.5	3.1	3.9	3.8	3.3
8 음식료	4.6	3.5	3.7	5.1	4.3	3.5	2.8	2.7	3.4	3.0
9 가 전	6.0	2.2	2.3	2.0	2.8	1.1	1.7	1.9	2.1	2.0
10 유 리	0.7	0.7	1.3	1.7	0.8	2.7	1.8	2.0	1.4	1.6
합 계	47.9	75.0	77.8	77.6	80.2	81.9	83.9	82.0	81.0	83.1

출처: 산업연구원(2010), 『주요산업동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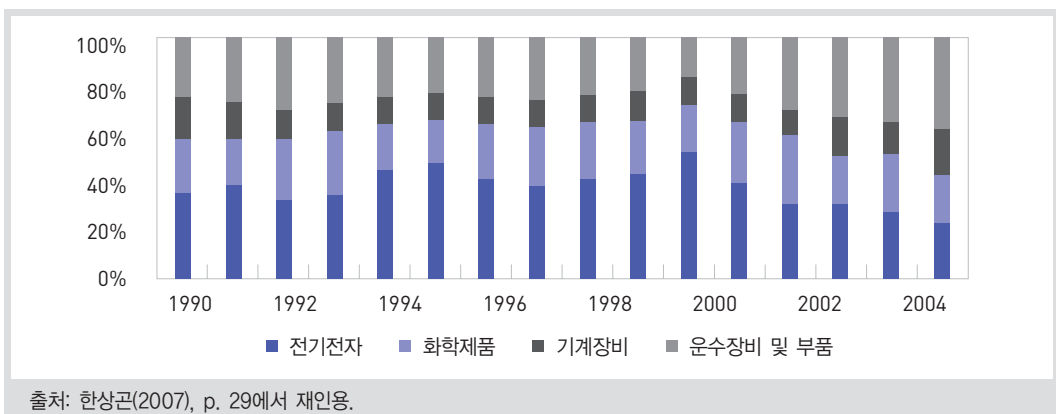
한국 기업의 설비투자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5대 수출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전체 투자 중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1995년 69.3% 였던 것이 2008년에는 58.7%까지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의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감소추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0대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점차 증가하여 1995년 47.9% 였던 것이 2000년에는 75%, 2008년에는 전체 설비투자의 83.1%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에 대한 설비투자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핵심 수출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후반 기업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일본의 산업투자는 운수장비 및 부품 분야에 집중되었다. 1990년대까지는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운수장비 및 부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전기전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5.5%에서 2007년 20.2%로 감소하였지만, 자동차는 1995년 20.3%에서 2007년 24.8%까지 증가하였다. 자동차 부문은 2000년대 해외생산 비중이 50% 정도로 높아졌지만 국내 수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한편 자동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2.3%에서 2007년에는 3.5%까지 증가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7.9%를 차지함으로써 일본의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도표6-6〉 일본의 산업별 설비투자 추이 1994~2005



문제는 이러한 설비투자와 산업구조 변화가 가져올 결과다. 자동차 산업은 경제위

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다. 대형 소비재에 대한 구매가 급감하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큰 일본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부문은 회복이 빨랐다. 경제위기로 기술혁신이 촉진되면서 반도체 등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고급기술 중심의 소비재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경제는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전자부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는데 반도체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장함으로써 경제위기의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중국효과(China effect)가 컸다.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의 상당부분이 중국시장에 집중됨으로써 수출이 지속되었고, 한편으로는 중저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산업이 중국의 수요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20%를 넘어섰다.

다음은, 수출주도 산업구조와 정부의 역할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정치적 민주화에 따라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방식은 가능하지 못하다. 한국과 일본 공히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행정체계 개편과 규제개혁을 통해 과거 정-관-산업계의 연계는 과거처럼 긴밀하지는 못했다. 통산성의 개편과 금융개혁으로 인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단식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특히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2008년의 금융위기(리먼쇼크) 이후 미·일·중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환 정책에 더하여 산업육성, 기술개발, 수출진흥,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금융개혁과 금융자유화, 직접 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라 정책자금을 동원한 경제정책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금융공기업 등의 특수은행과 기금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세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였다. 또 정부는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여 대기업 중심의 수출경쟁 구도를 강화시키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에서 보듯 특정 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IV_한일경제협회의 활동

2005년 2월 조석래 회장이 한일경제협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조석래 회장은 1971년 제3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부터 참가하면서 한일 경제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1987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 새로이 설치된 ‘한일21세기 위원회’, ‘한일포럼’ 등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05년 제9대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7년에는 제31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석래 회장

2009년 11월 일본정부로부터 한일교류 확대에 대한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수상하였다.

1. 한일경제인회의

1992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고 1999년부터 산하 3개의 전문위원회가 신산업무역회의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한일경제인회의는 민간차원의 한일 경제협력 관련 최고협의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전문위원회 및 기술협력재단의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수출촉진단 파견 및 중소기업 세미나 및 상담회 등을 통해 한일 경제협력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5년 이후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협력방안, 환경·에너지 협력, 한일 FTA,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2005년 4월, 서울) 개최 무렵, 한일 양국 간에는 역사교과서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인가 여부를 놓고 많은 어려움에 놓였으나 이럴 때 일수록 양국 경제인들이 자주 모여야 한다는 회장단과 회원사의 지지에 힘입어 본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2005년 2월 취임한 조석래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시장을 열고, 무역과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한일FTA 체결을 통해 촉진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양국이 사실에 입각하여 옳고 그른 것을 밝히면서 흥금을 털어놓고 본심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보와 희생을 감수하고 상호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보일 때 두터운 신뢰가 쌓이고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한편 일본측 세토(瀬戸)회장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양국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개회인사를 하였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과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이하여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 정상 축하메시지 전달과 양국경제협력에 공헌한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과 후지무라 마사야(藤村 正哉) 일한경제협회 상담역에 대한 특별공로상 수여가 있었으며, 과거 회의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2006년 제3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먼 일본 삿포로(札幌)에서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283명에 이르는 많은 기업인들이 참가하였다. 당시 역사 인식과 영토문제 등으로 어려워진 한일 관계 속에서도 양국 경제계는 외부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항구적이며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일 협력을 바라는 경제인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던 회의였다.

개회인사에 나선 조석래 회장은 동아시아의 활력을 한층 더 키우기 위해서는 북

미의 NAFTA나 유럽의 EU에 상당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일FTA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양국 정부에 건의하고,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한일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일본측은 개회인사에서 작년 ‘한일 우호의 해’ 행사에서 열린 ‘한일 고교생·대학생 토론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들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 좋은 점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경제를 중요시하는 두 나라가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 다음해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양국에서 312명의 경제인이 참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어섰다. 한국 대표단을 대표하여 조석래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최근 한일 간의 무역과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일FTA체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일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이 정말로 단합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상대국의 문화를 알아 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최근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문화교류는 양국 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일본측 이이지마(飯島)회장은 개회인사에서 6년 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고 이수현 씨를 추모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는 한일합작영화 시사회에 일왕(日王)내외가 참석한 일을 소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아시아의 역동성과 성장 동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같은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한일FTA·무역확대·양국 간 투자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 한일 간의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에 양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가 되었다. 한편 한미FTA의 타결 직후 개최된 본 회의에 수많은 한일 양국 기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한일 경제계의 가장 핵심 이슈인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한일FTA 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일FTA의 조속한 체결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 후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 회장 연명으로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내각총리대신께 한일FTA의 조기 체결을 바라는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한일 양국 정상께 제출한 한일FTA 촉구 요망서〉

2007년 4월 26일

노무현 대통령님

현재 한일 양국은 무역과 투자, 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설립 이래 꾸준히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 협회가 금년 4월 12일, 13일 양일에 걸쳐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는 300여명의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여 양국간의 향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일FTA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이어나갈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경제인들은 지금의 굳건한 동반자관계를 지속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FTA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FTA를 하루라도 빨리 타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이 FTA를 맺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이 향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WTO 등의 다자간 협상에 있어, 동아시아의 입장이 뚜렷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한일FTA가 조속히 체결되도록 영단을 내려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趙錫來

(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飯島英胤

2007 年 4 月 26 日

内 閣 総 理 大 臣
安 倍 晋 三 閣 下

現在日韓両国は貿易や投資、人的交流の拡大により緊密な協力関係を拡大・発展させております。

日韓経済協会と韓日経済協会は設立以来継続して日韓両国の経済協力と友好増進を通じた共同繁栄を推進して参りました。両協会が今年 4 月 12 日、13 日の両日に亘り韓国・釜山広域市で開催致しました第 39 回日韓経済人会議には 300 名余りの両国経済人が参加し、両国間の今後の経済協力の重要性を再確認し、日韓 FTA や東アジア経済共同体に繋がる具体的な協力方策などを論議いたしました。

今回の会議で両国の経済人は現在の確固たるイコールパートナーシップとしての関係を持続させ、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を更に発展させて行くためには、現在進展を見せていない日韓 FTA 交渉が早急に再開され、包括的で水準の高い FTA を一日も早く妥結させ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で意見の一致をみました。

日韓両国が FTA を結び、一つの経済圏を形成することによって両国経済を活性化し、更に今後、東アジア経済共同体を構築する上において両国が主導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ができます。且つ、WTO などにおける多国間の交渉において東アジアの立場が的確に反映される基盤が作られるものと信じてお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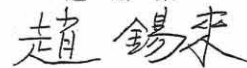
安倍首相閣下の卓越したご指導により、日韓 FTA が早期に妥結できますようご英断を賜りたく、要望申し上げる次第であります。

安倍首相閣下のご健勝を心よりご祈念申し上げます。

(社)日韓経済協会 会長
飯島 英胤



(社)韓日経済協会 会長
趙 錫来



한편 2008년에는 일본 우라야스(浦安)에서 개최된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및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총리대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한국측을 대표하여 조석래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여 후쿠다(福田)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회인사를 하였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 같은 양국간 합의를 실천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렇게 되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기술협력이 크게 늘어나 두 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짜 상인은 상대방의 이익이 되고, 자기도 이익이 되는 길을 늘 생각한다’는 일본 상도의 선각자 이시다바이칸(石田梅岩) 선생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상생협력 정신이 한일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측은 개회인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 같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기념강연에서는 한일 경제인에 의한 무역, 투자 등의 경제제휴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과 한일FTA/EPA 교섭 재개·체결에 대한 기대가 표명되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969년 1월 양국 주요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한일·일한경제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를 정례화 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 경제인들 간의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양국의 경제성장과 경제관계 강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회의로 자리매김 하였다.

40회 회의는 2008년 4월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균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2008, 우라야스시)

형 있는 확대와 그 실현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과 궤도를 같이하여 개최되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개발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무역불균형 개선만이 양국 경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간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분야에 대한 협력과 대한투자확대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서울)는 2008년 한일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한국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일 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회’ 및 ‘한국 비즈니스 미션’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분야에 있어서 산업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일 협력의 밝은 무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조석래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닌 국가로서 아시아의 발전을 주도하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면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개방과 경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제도를 바꿈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일본기업이 대한 투자를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노사관계도 정부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불법 파업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노조 스스로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협상·단체협약과 같은 노사교섭도 회사에 위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일본측 대표단 단장으로 개회인사를 한 이이지마(飯島)회장은 ‘폭풍우가 몰아쳐야 비로소 어떤 풀이 강인한지 알 수 있다(疾風に勁草を知る)’는 일본 속담을 소개하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한일 양국이 연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양국 경제인들은 유례없는 세계동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0년 4월 일본 오카야마(岡山)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인사를 통해 조석래 회장은 앞으로는 구미(歐美)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의 역내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세계경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구미, 특히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바탕으로 과잉소비를 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장기 불황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들 서구 국가들의 소비가 세계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감동의 기억을 되살려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이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대의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굳건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일본 측은 한국과 일본의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를 보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한일 FTA의 조기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42회 회의에서는 제언·협약체인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온 무역·투자 활성화, 인재교류 활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 이명박대통령을 예방한 일본대표단 / 전시회방문(2009, 킨텍스)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경제협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양국 단장 공동기자회견 모습(2009, 서울)

성화,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강화 등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과제에 대해 자문하고, 시책의 확실한 실현을 향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양국 정부에 제언요망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하였다. 양국 협회는 대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 요망사항과 한국에서의 투자환경 정비를 위한 요망사항,

그리고 양국 간 인재교류 활성화 방안과 부품소재산업 협력을 위한 협력과제(프로젝트)를 정리하여 2010년 6월 양국 정상에게 제출하였다. 이들 과제는 양국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투자와 인재 등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테마로, 향후 제언요망사항이 실현된다면 한일 간의 경제협력과 인재교류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시장에서 크게 성장하여 존재감을 드높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공유되었다. 그 중에서도 경제공동체형성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한일 간의 FTA/EPA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조기실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수년간 양국 경제인은 한일경제 협력의 핵심인 FTA/EPA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으나, 지금까지 FTA/EPA 체결의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그린 비즈니스와 관련한 논의가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녹색성장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어,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린 비즈니스 분야의 새로운 한일협력과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일 양국은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해 폭넓게 향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관계자 간에 공유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표6-4〉 한일·일한 경제인회의 개최 요약 2006~2010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 치 사 항
38회	삿포로 2006.05.25 ~ 05.27 한국133명 일본1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분과회 : 한일 FTA체결과 21세기 한일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FTA 추진정책과 한일FTA 시사점 새로운 21세기 한일관계 제2분과회 : 한일양국의 공동과제와 협력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일양국의 협력과제 한일양국의 공동경제과제와 협력방안 전체회의 : 상호이해증진 및 문화, 인적 교류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에 있어서 문화, 물질, 인적 교류 중요성 지금 한일관계를 생각한다 한국과 북해도 교류현황과 향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제천) 제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대전) 방일수출촉진단 사업 2회 20개사 33명 한일 교교생 캠프 한93명, 일103명 한일중소기업세미나·상담회 (도쿄, 서울) 제7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교토)
39회	부산 2007.04.12 ~ 04.13 한국197명 일본1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세션 : 동아시아의 부상과 한일협력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 한일 FTA 추진 전망과 과제 중국의 산업정책 및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한일 FTA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로드맵(Road Map) 제2세션 : 한일 양국의 협력과제와 대응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양국의 무역확대 전망과 과제 한일 양국 간 투자증진을 위한 환경조사 마쓰시다(松下)전기가 도전하는 환경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 제13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사가) 제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중국 일조시) 방일수출촉진단 사업 2회 25개사 34명 한일 교교생 캠프 한87명, 일80명 한일비즈니스 상담회 한일중소기업세미나·상담회 (도쿄, 서울)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치사항
40회	우라야스 2008.05.15 ~ 05.17	한국136명 일본16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세션 : 한일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제제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경제협력 : 전자부품 사례와 발전방향 2. 한일 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3. 이노베이션 창조능력 강화 과제 제2세션 : 한일 간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위하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개선과제 2. 한일 간 부품소재 산업의 교류실태와 협력 3. 한국의 대중국 무역편중의 빛과 그림자 4. 한국의 균형 있는 무역 확대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요코하마) 제14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부산) 한일 고교생 캠프 한80명, 일80명 한일비즈니스 상담회 (빅사이트, 14개사 20명) 한일중소기업세미나 · 상담회 (도쿄, 서울) 제8회 한 ·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울산) 제7회 환경해경제기술교류회의 (구마모토)
41회	서울 2009.04.16 ~ 04.17	한국188명 일본1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세션 : 한일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일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2.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기회 3. 대한투자 활성화 4. 한일 간 투자확대를 위해 제2세션 : 한일 환경, 에너지 협력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2. 기후변화 협약과 기업의 대응 3.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4. 아시아 지역의 자원순환형 사회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 한일 고교생 캠프 한94명, 일94명 한일중소기업세미나 · 상담회 (도쿄, 서울) 제15회 한일(九州)경제교류회의 (키타큐슈) 제9회 한 ·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카나자와) 제8회 환경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인천) 환경에너지 절약 전문 기술자 연수(후쿠오카)

구 분		참 석 자	주 요 안 건	합 의 및 조치사항
42회	오카야마 2010.04.15 ~ 04.16	한국110명 일본14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세션 :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일협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 관계 2. 동아시아 시장에서 한일 기업간 협력방안 3. 동아시아 경제연대와 한일경제협력 4.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한일관계 ◎ 제2세션 :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의 시사점 2. 녹색성장을 위한 Smart Grid 3. 환경 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망 4. 태양광 발전 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도쿄) ◎ 한일 고교생 캠프 한93명, 일83명 ◎ 제16회 한·큐슈 경제교류회의 (광주) ◎ 제10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원주시) ◎ 제9회 한·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중국옌타이)

2. 한일신산업무역회의

1999년 기존의 3개 전문위원회(무역투자, 기계공업, 산업일반)를 통합한 한일 산업무역회의는 2006년에 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3회의 Task Force회의와 2회의 체어맨회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개편방안의 요지는,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 및 요망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같은 목적을 위한 4개의 미션으로써 한일 간 무역확대, 한일 간 투자확대, 한일 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한일산업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회의를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테마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회의명칭도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新산업무역회의」로 변경하였다.

이 같은 개편방안은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2007.4. 부산)에서 승인받아 2007년 제9회 회의부터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규약

2007년 3월 16일

1.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신산업무역회의로 한다

2. 조직

- (1) 본 회의는 한일 양국 경제계의 연락·협의기관으로서 (사)한일경제협회 및 (사)일한경제협회 회원 등으로 조직된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산하 회의체로서 운영되며, 별도로 정하는 활동을 통해 경제인회의를 보좌·보완한다.
- (2) 양국은 매년 1회, 혹은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한일합동 신산업무역회의(이하,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 (3) 합동회의는 양국 각각 의장(체어맨) 1명, 부의장(부체어맨), 코디네이터 약간 명을 둘 수가 있다. 의장은 본회의의 경제인회의에 대한 대표책임을 맡는다. 부의장, 코디네이터는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4) 합동회의는 각국의 국내회의의 모든 위원이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양국은 본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국내회의를 설치하여 자유롭게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목적과 활동

- (1) 경제인회의를 보좌·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인식 공유와 아울러 경제인회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 등에 제안·요망하는 것을 본 회의의 목적으로 한다.
- (2) 전항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양국 경제의 현상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검토를 한다.
 - 2) 합동회의는 이하 4개의 미션에 대해 한일 공동의 과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산업과 무역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서 토의한다. 4개의 미션은 ①한일간의 무역확대 ②한일간의 투자확대 ③한일간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④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를 칭한다.
 - 3) 상기 사항에 관해 애로사항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업계 등에 제안·요망을 경제인회의에 제안한다.
 - 4) 제안·요망을 실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양국이 각각 또는 합동으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의 활동을 한다.
 - 5) 기타 각 국내회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토의, 의견교환을 한다.

4. 운영

- (1) 합동회의는 원칙적으로 교대로 양국내에서 개최한다.

- (2) 합동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의의 분과회 등을 둘 수 있다. 실시할 경우에는 의장 등의 인선은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3) 합동회의의 활동상황은 다음에 개최되는 경제인회의에 보고한다.
- (4) 합동회의 개최기일은 경제인회의 개최 후 반년 경과시점을 목표로 한다. 기간, 의제, 기타 개최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항목은 원칙적으로 양 국내회의의 동의에 의거하여 사전에 결정한다. 합동회의는 필요에 따라 연도내 복수회의 개최도 실시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경비

합동회의 개최에 있어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각 경비는 기구, 비품은 기본적으로 주최국 부담으로 하고 리셉션은 양국이 절반씩 부담하며, 참가자의 여비, 체재비 등은 각각 양국 개별부담으로 한다.

6. 사무국

- (1) 합동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 국내회의에 각각 기획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의 사무국을 둔다.
- (2) 양국 사무국은 의장, 부의장(부체어맨), 코디네이터와 양국 경제협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사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 (3) 사무국장은 양국 경제협회에서 선출된 위원(간사위원)이 맡는다.

본 규약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하고, 양문(兩文)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 규약은 한국측 및 일본측의 체어맨이 서명한 후 각각 보관한다.

이상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신산업무역회의 한국측체어맨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신산업무역회의 일본측체어맨

유 창 무

麻生 泰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2008년에는 한일 간 무역투자활성화, 2009년에는 한일인재교류 활성화(위원장: 정진영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장 / 麻生 泰 아소라파즈시멘트 사장), 한일부품소재산업 협력강화(위원장: 이덕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장)를 위한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의 조사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과제와 개선요망사항을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2010.4 오카야마)에 보고, 승인을 받아 2010년 7월에 양국 정부에 28건의 제언요망서와 액션플랜을 제출하였다.

인재교류 활성화문제는 향후 글로벌화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선행적 대처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과제이며, 무역투자활성화 및 부품소재협력 강화문제는 한일FTA를 체결하여 양국이 경제교류를 광범위하고 활발히 추진하는 기반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Follow-Up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개최경과 및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5〉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경과

횟수	일 시	지 역	참가자	주요 내용
9	2007.11	요코하마	유창무 চে어맨 이수철 코디 등 40명/麻生 泰 চে어맨, 清水紘 一郎 코디등 35명	- 저출산과 기업경영/전문위원회 - 한일기업간 협력/전문위원회 - 한일 간 투자상황 보고
10	2008.12	서울	고광석 চে어맨대행/ 이수철 코디 등 33 명/麻生 泰 চে어맨, 清水紘一郎 코디등 32명	- 대일무역역조 개선대책/에너지와 환경 대응방안 - 한일양국의 무역·투자활성화 방안/ 투자전문위원회 보고
11	2009.12	도쿄	오영호 চে어맨/ 이수철 코디 등 41명/麻生 泰 চে어맨, 泊 三夫 코디 등 32명	- 한일인재교류 활성화 보고/전문위원회 (한국청년인재의 일본기업 고용 추진/ 자격 상호승인) - 한일부품소재산업 협력강화/전문위원 회(M&A 활성화, 클러스터간 연계협력 /통계분류체계 연계 및 활용)

횟수	일 시	지 역	참가자	주요 내용
12	2011.02	서울	오영호 체어맨/ 이수철 코디 등 37명/麻生 泰 체어맨, 泊 三夫 코디 등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산업협력, 인재교류 활성화 제언요망서 진척상황 및 과제 - 한국인재 일본 취업방안 - 한일 간 IT기술자 교류문제/자격인재의 고도화 - 한일FTA - 중장기 대처방안 제언 TOP회의

〈표6-6〉 연도별 추진경과

년 도	산업일반위원회 1991~1999	⇒	산업무역회의 1999~2007	⇒	신산업무역회의 2007~현재
1991년	○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한일산업일반위원회」설치 - 위원장 : 韓) 유찬우 풍산 회장, 日)와타리 스기이치로 도시바 상담역				
1998년	○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각 전문위원 회의 시스템 재점검에 합의 - 1993~1999 한일산업일반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 조석래 효성 회장 - 성과(태스크 포스 활동) ① 1992 한일산업기술협력방안 ② 1993 한일환경문제의 현상과 산업계의 대응 ③ 1995 한국의 투자환경요인으로서의 노사관계 ④ 1998 한국의 투자환경연구				
1999년	○ 기존 3개전문위원회(무역투자, 기계공업, 한일산업일반)를 통합 「한일산업무역회의」로 재출범 - 1999년 제31회 경제인회의(서울)에서 상기 전문위원회의 통합 제언 승인 - 설립취지 : 참가위원들의 자유로운 입장을 존중, 의견교환과 정보교환을 우선 하고 합의사항이나 결의사항 없이 인식의 공유를 키워드로 운영 - 한국측 체어맨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당연직으로 활동				
2007년	○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 등에 제언 요망하는 문제해결형 회의로 개선하기 위하여 「한일新산업무역회의」로 명칭 변경 - 2007년 제39회 경제인회의(부산)에서 상기 내용 보고 및 제언 승인				

〈한일 양국 정상께 제출한 제언요망서 송부장〉

대한민국 이명박(李明博) 대통령님

2010년 6월 9일

한일/일한 兩경제협회는 양국 경제의 협력촉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양국 정부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 협회는 올해 4월에 오카야마시(岡山市)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 약 260명이 참가하여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제언·협의체인 신산업무역회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온 한일 간의 중요 공통과제 3가지를 상정하여 토의하였습니다.

활동테마 :

1. 한일 간의 무역·투자 활성화(한일 공통테마)
2. 한일 인재교류의 활성화(일본측 테마)
3.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강화(한국측 테마)

이들 과제는 양국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투자와 인재 등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에 한일/일한 兩경제협회는 양국 정부에 대해 제언요망 사항을 정리하여 별지와 같이 제출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제언요망사항이 실현된다면, 한일 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함과 동시에, 한일 간의 경제협력과 인재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조 석 래 (趙 錫 來)

(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英胤)

趙 錫 來

飯 島 英 胤

첨부서류 : 한일 간 중요과제에 관한 제언요망 요약

日本国 内閣総理大臣 菅直人閣下

2010年6月9日

日韓/韓日両経済協会は両国経済の協力促進、経済交流の活性化に向け活動を続けております。これまで多大なご協力とご支援を賜り、両国政府に対し心から厚く御礼を申し上げます。

両協会は本年4月に岡山市で日韓両国の経済人約260名が参加し第42回日韓経済人会議を開催致しました。本会議では、提言・協議体であります新産業貿易会議を中心に検討して参りました日韓間の重要共通課題3点を上程して討議致しました。

活動テーマ：

1. 日韓間の貿易・投資の活性化（日韓共通テーマ）
2. 韓日部品素材産業の協力強化（韓国側テーマ）
3. 日韓人材交流の活性化（日本側テー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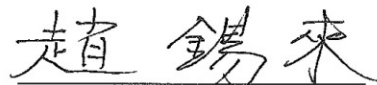
これらの課題は両国の経済交流を更に拡大し、投資や人材等の活性化を推進していく上で重要なテーマです。ここに日韓/韓日両経済協会は両国政府に対して提言要望事項を取りまとめ別紙の通りご提出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何卒善処方お願い申し上げます。

本提言要望事項が実現して頂ければ、日韓両国の経済発展に大きく貢献すると共に、日韓間の経済協力や人材交流がより一層活性化されるものと期待致しております。

(社) 日韓経済協会 会長
飯島 英胤

(社) 韓日経済協会 会長
趙 錫 來





添付書類：日韓間重要課題に関する提言要望要約

한국 정부로의 한일 간 중요과제에 관한 제언요망 요약

I. 제언요망

1. 일본측

2008년 4월 한일정상회담(이명박 대통령/후쿠다 야스오 총리)을 계기로 한일 간 상호투자 확대와 양국 간에 대한투자환경의 개선 및 구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글로벌화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선행적 대처에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 고급인재의 교류 및 자격공동화/자격인재 고급화가 과제입니다.

본 제언은 한국에서의 투자환경 정비를 위한 요망사항과 양국 간 인재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향후 한일 FTA/EPA를 체결하여 양국이 경제교류를 광범위하고 활발히 추진하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1) 대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일부 부당한 노동 운동에 대한 법의 엄격한 적용
2. 법정 퇴직금 제도의 개혁(퇴직금 일률지급에서 사유별 지급화)
3. 노조 전임자 급여에 대한 회사 부담의 폐지
4. 공업단지 등에서의 경제 특구의 개념과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특히 일본 부품소재 전용단지에 적용. 완화대상으로서 법정 퇴직금 일률지불의무, 중소기업 정의변경
5. 기업기밀(기술 노하우 보호 등)에 관한 관련법규의 엄정한 운용
6. 지적재산법규의 정비·계획·조직의 확립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
7. 특허출원제도에 있어서 영어 출원의 인정
8. 중소기업 대상 대출비율규제의 탄력적 운용(외국기업)
9. 『중소기업』 정의변경에 따른 세제에 대한 영향 개선(외국기업 우대책의 계속)

(2) 한일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한국 청년 고급 인재의 일본기업 고용 추진
 - ① 한일 공통의 시책 : 고급인재의 교류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의 정비
 - 유학생 수용/취업의 지원제도 확충 : 새로운 추진방안 구축
 - 상호 니즈에 대응 가능한 체제 정비 : 취업 지원 사이트 개설/공동설명회 개최
 - 일본어 및 일본 비즈니스 관행의 보급 : 비즈니스 일본어의 한국으로의 보급
 - 인턴십제도의 확충 강화 : 수용 조건(기간) 조정
2. 자격상호인증/자격인재의 고급화
 - ① 중상급 IT기술 : 연수의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한 자격상호인증의 추진
 - ② 관광역행 : 연수의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한 자격상호인증의 추진
 - ③ 개호(介護) : 아시아 개호인재 양성기관을 설치하고, 개호인재의 교류 연수, 연수의 표준화, 일본자격의 한국 인증 및 중기적으로 한일 신자력의 상호 인증을 추진
 - ④ 환경 : 한일 환경인재 교류회(가칭) 설치, 新연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컨설팅 인재육성 및 연수/강습의 활용을 통한 자격상호인증의 추진

2. 한국측

2008년 4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투자 확대와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있어서 산업간 교류에 대한 기대가 표명되었습니다.

양 협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해 왔으며, 본 제안은 대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 요망사항과 양국 간 부품소재산업 협력을 위한 협력과제(프로젝트)를 정리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양국 기업인들은 애로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양국의 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제안

1. 한일 간 M&A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 M&A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상설 상담창구 설치
2. 한일 부품소재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추진
 - 공동연구, 기술교류회, 전시회 등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3. 부품소재 통계분류 체계화를 위한 공동 연구 실시
 - 한일 간 공통분류체계 마련을 통한 동일한 산업구조 분석
4. 부품공용화 및 상호인증 확대를 촉진
 - KS와 JIS의 정합성이 용이한 부품부터 부품공용화의 점진적 확대 및 상호인증제도인 '아시아통합인증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하여 활동을 강화

II. 참고

▽ 한국측의 일본에 대한 제안 요망 : 대일 무역·투자 활성화

1. 수출입 안전관리 종합인증우수업체(AEO)공인제도의 상호인정협정 조기체결
2. 국제적 승인을 취득한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완화
3. 하역회사 선정과 관련한 일본항운협회와의 사전협의 의무제도의 개선을 희망
4. 롤 상태, 재단한 카메트원단에 대해 무관세 적용 희망(자동차용으로 분류)
5. 한국 특수차량의 일본국내 임시운행 허용을 희망
6. 공공공사 및 대형공사 발주 시, 일본 철강회사 제품 지정 관행을 개선
7. 전력회사의 발전설비 입찰 시, 외국기업 차별적 조건(제한경쟁입찰)을 개선
8. 건설공사 현장의 선임기술자 배치에 대한 외국업체의 자격요건 완화를 희망
9. 요리사의 일본 취업비자 발급 조건 완화를 희망

▽ 일본측의 일본에 대한 제안 요망 : 한일 인재교류 활성화

1. 한국 청년 고급인재의 일본기업 고용 추진
 - ①일본 측 수용 시책 : 취업 기회의 확대
 - 기업 측의 의식개혁, · 정착을 위한 체제 구축 : 연금 조건 개선